

극우리포트—  
성소수자  
협오에서  
내란옹호까지







이 보고서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48개 단체가 함께하는  
연대체입니다. 12·3 내란 이후,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을 결성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상 평등이념을 실현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전국 168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이며, 전국 15개 지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인권시민사회 지역네트워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무지개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결합하여 12·3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 회복과 평등사회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사진 활용을 허락해주신 뉴스앤조이에  
감사드립니다.

극우리포트—  
성소수자  
혐오에서  
내란옹호까지

# 목차

1 위기의 민주주의	6
2 극우, 고개를 들다	10
3 한국 극우와 보수개신교	21
4 정치화된 성소수자 혐오	33
5 위협받는 평등, 무너지는 민주주의	45
6 혐오의 연쇄와 외부의 적	55
7 이익에 기반한 극우 연합	65
8 더 넓은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	76
9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전하는 메시지	85
[부록 1]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시국선언문	89
[부록 2]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시국선언문	92

# 1 위기의 민주주의



12·3 내란 이후 출현한 극우 세력은 우리 사회를 커다란 충격에 빠트렸다. 이들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고, 헌법 기관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무너트리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얼굴은 어딘가 익숙하다. 성소수자 혐오를 일삼으며 세를 확장해온 보수개신교 집단이 아닌가?

지난 이십 여년 동안 이들은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구심점으로 전국의 교회 네트워크를 동원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왔다. 이들은 동성애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위기의식과 공포감을 조성하며 특정 집단을 사회에서 배제시키는 극우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그간 정치권과 언론은 보수개신교의 혐오 선동을 방관하거나 때로는 부추겼다. 보수정당은 물론 민주당조차 ‘사회적 합의’라는 실체 없는 핑계를 대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어 왔다. 동성애에 대한 ‘찬반’을 묻는 일은 ‘빨갱이’에 대한 낙인처럼 새로운 사상검증으로 자리잡았다. 주류 언론은 성소수자 인권을 ‘논쟁적 이슈’로 다루며 보수개신교의 혐오 선동을 ‘다양한 의견’의 하나로 취급했다. 그 결과 보수개신교는 동성애 ‘반대’를 명분으로 민주주의 질서와 인권의 가치를 파괴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배제와 폭력을 일삼는 극우 정치의 중심 세력으로 자라났다.

12·3 내란 이후 가시화된 극우 세력의 중심에는 바로 보수개신교가 있다. 이들은 강력한 조직력과 동원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물리적인 실력 행사에도 주저함이 없다.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라는 점에서만이 아니라 극우 정치를 우리 사회의 주류로 소환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도전을 불러왔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무지개 깃발과 다양한 빛깔의 응원봉을 들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사회를 염원하는 연대의 표현이다. 이들은 탄핵 이후 민주주의와 일상의 회복이란 단순히 12·3 내란 이전으로의 복귀여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 정치가 혐오와 차별을 먹고 자라난 것이라면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바로세우는 것이야 말로 탄핵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이다.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장애인 등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나중'으로 남겨두는 민주주의란 없다. 그것은 극우 정치가 자라나는 자양분에 불과하다.



윤석열 퇴진 집회에는 수많은 무지개 깃발이 함께하고 있다.  
출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이 보고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 가시화된 극우 세력의 특징과 이들이 결집한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극우 세력화의 주된 동력으로서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이 차지한 역할을 검토한다. 이는 12·3 내란 이후 극우 세력의 결집이 우연이나 돌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온 혐오 정치의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를 영역 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오늘날 전지구적 차원에서 확산하고 있는 극우 정치의 일반적 특징과 지역적 변형을 다룬다. 3장은 한국 사회의 극우 세력이 출현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다루며, 특히 보수개신교가 오랜 반공주의와 성소수자 혐오를 결합하면서 극우화되는 과정을 살핀다. 4장은 구체적으로 보수개신교가 성소수자 혐오를 '정치화'하는 메커니즘과 그것의 정치적 효과를 분석한다. 5장은 혐오 정치가 인권과 성평등 제도 전반을 무력화하고, 민주적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며, 심지어는 극단적 폭력으로 나아가는 극우화의 사례들을 다룬다. 6장은 이러한 극우의 혐오 정치가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타자'를 대상으로 연쇄되어 있음을 검토한다. 나아가 7장에서는 다양한 궤적에서 성장해온 극우 세력이 12·3 내란 이후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중심으로 빠르게 결집하고, 정치권과 언론의 승인 속에 주류화되는 문제적인 과정을 검토한다. 8장에서는 내란을 종식하고 극우를 넘어서기 위한 과제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9장에서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을 향한 메시지를 담았다.

2

극우,

고개를 틀다

# 현대 극우의 전지구적 확산

<sup>1</sup> “선거불복 쿠데타 모의 혐의로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기소”, 〈연합뉴스〉, 2025.2.19; “SNS는 어떻게 브라질 의회 난입을 선동했나”, 〈BBC〉, 2023.1.10.

2021년 1월 6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이 폭도에게 점거되었다. 이는 평범한 시위가 아니었다.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극우 폭동의 결정적 순간이었다. 2년 뒤, 유사한 사건이 브라질에서도 발생했다. 2023년 1월 8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연방의회, 대법원, 대통령궁을 습격하며 폭동을 일으켰다.<sup>1</sup> 두 사건은 비슷한 점이 많다. 정치 지도자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고, ‘도둑맞은 선거’라는 음모론이 확산되었으며, 지지층은 폭력을 불사했고, 온라인을 통한 조직적인 선동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오늘날 극우 세력의 조직과 확산의 양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지난 몇 달 간 한국에서 펼쳐진 일이기도 하다. 극우 음모론에 경도된 현직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를 지키겠다고 나선 일부 지지자들은 물리적 폭력을 서슴치 않으며 1·19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일으켰다. 극우 세력은 더이상 온라인 공간이나 주변적인 정치 영역에 머무르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이들은 법원 등 국가기관을 공격하고, 대학 교정에 난입해 폭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 제도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이것이 일회성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도대체 극우는 누구인가? 한국 극우의 형성과 이들의 성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장에서는 먼저 오늘날 극우 정치가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는 일반적인 양상을 검토한다. 각국의 사례를 통해 극우가 서로를 참조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맥락에 따라 전략과 구호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 각국의 극우 정당 및 단체는 반젠더(anti-gender), 반이민,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도구로 활용하며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극우 세력은 이러한 일반적인 특징과 전략을 공유하지만, 조직과 결집의 역사적 경로 및 방법에 있어서는 차별화되는 면이 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출현한 극우 정치의 위험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에 맞서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을 습격했다. 건물 곳곳이 파괴되었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출처: "DC Capitol Storming IMG 7965", © TapTheForwardAssist,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 극우는 누구인가

2 카스 무데, 『혐오와 차별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 열 가지 키워드로 읽는 21세기 극우의 현장, 위즈덤하우스, 권은하 옮김, 2021, 13.

3 카스 무데, 위의 책, 14. 따라서 윤석열과 그의 지지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자신의 신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카스 무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극우의 발전을 4개의 물결(waves)로 구분한다. 첫 번째 물결(1945-1955)은 네오파시즘(Neo-Fascism)으로, 패전 이후에도

정치학자 카스 무데는 유럽과 미국의 극우를 분석하면서 극우(Far Righ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극우는 보수주의 내지 자유주의와 같은 ‘주류’ 우익과는 확연히 구분되며, “자유민주주의에 적대적인 ‘반체제’ 성향”을 띤다.<sup>2</sup> 극우는 다시 극단우익(Extreme Right)과 급진우익(Radical Right)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극단우익은 국민주권과 다수결 원칙 등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면서 완전히 반민주적인 입장을 취한다(예: 파시스트, 나치). 반면, 급진우익은 이론적으로 민주주의 제도 자체는 인정하지만,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의 핵심 요소인 평등, 소수자의 권리, 법치주의, 권력분립 등에 도전하거나 반대한다.<sup>3</sup> 한편 극우는 일반적인 특징을 공유하지만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가령 나치즘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불완전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심과 혐오를 먹고 자라났다. 유럽연합(EU)이 1993년 창설된 이후 유럽 여러 지역의 극우 정당은 유럽연합에 대한 회의론(Euroscepticism)과 반이민 정서를 기반으로 자라났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독일을위한대안(AfD)과 같은 최근의 극우 정당은 인종차별주의 및 반이민 정서에 더해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활용한 코로나 백신 반대운동을 부추기며 세를 확장했다. 포퓰리즘과 극우는 서로 다른 현상이지만, 최근 주류화된 극우는 전통적인 우익 사상을 포퓰리즘적 수사와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특징을 보인다.

200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부상한 극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극우의 네 번째 물결로 불리운다.<sup>4</sup> 극우의 네 번째 물결이 공유하는 이념적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인종차별주의, 배타적 민족주의(Nativism), 종족민족주의(Ethno-Nationalism)다. 극우 포퓰리스트는 특정 민족과 문화를

파시스트 이념을 유지하려는 세력이 중심이 되었다(예: 이탈리아의 MSI, 독일의 반나치법 저항 세력). 두 번째 물결(1955-1980년대)은 민족주의 극우(Nationalist Far Right)의 부상으로, 반공산주의와 반이민 정서를 결합한 극우 정당의 출현을 가리킨다(예: 초기 프랑스 국민전선, 영국의 민족전선). 세 번째 물결(1980년대-2000년대) 시기에는 급진우익(Radical Right)이 포퓰리즘과 결합하면서 주류 보수정당과 차별화되는 강력한 반이민, 반EU 성향이 두드러졌다(예: 오스트리아 자유당, 프랑스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체제). 네 번째 물결(2000년대 후반-현재)은 극우 포퓰리즘(Far-Right Populism)의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에 해당한다. 오늘날 극우는 반엘리트 정서를 강화하며 민주주의 제도를 이용해 권위를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의 MAGA,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헝가리 오르반 정권, 독일 AfD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대 극우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며, 반젠더, 반이민, 선거부정 음모론을 결합해 대중 동원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극우의 세 번째 물결과 네 번째 물결 사이에 이념이나 슬로건의 차이는 크지 않다. 다만, 세 번째 물결에 해당하는 급진우익은 체제의 바깥에서 활동하며 ‘도전자’로 머물렀다면, 네 번째 물결에서는 선거를 통해 주류화되고 정상화(normalized)된다. 이들은 이제 체제 내부에서 기만적인 전략을 펼치거나, 체제 자체를 장악하고 파괴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진정한 국민’으로 규정하면서 이민자와 소수자를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한다. 프랑스의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내세운 구호 “여기는 우리의 땅이다(On Est Chez Nous)”가 대표적이다. 독일을위한대안(AfD)의 구호 “이슬람은 독일의 일부가 아니다(Der Islam gehört nicht zu Deutschland)”는 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도 마찬가지다. 이는 미국이 이민과 세계화로 과거의 영광을 잃고 쇠퇴했다는 서사를 통해 백인 중심의 국가 정체성을 강조한다.



(좌) 2012년 5월 1일 국민전선 집회. 출처: © Blandine Le Cain, CC BY 2.0, Wikimedia Commons.



(우) 2016년 니더작센 AfD 홍보물 배포. 출처: © Oxfordian Kissuth,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두 번째 특징은 반세계화와 주권 우선주의다. 극우 포퓰리스트들은 국제 기구가 자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비난하며, 자유무역에 반대하고 자국의 산업 보호를 우선시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 기후협약 탈퇴,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등을 이어가며 국제 협력이 글로벌 엘리트가 국가를 조종하는 장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유럽에서도 유럽연합을 향한 극우 정당의 회의론은 난민 정책, 무역 협정, 금융 규제 등의 문제와 결합되면서 더욱 강화되어 왔다.

세 번째 특징은 강한 법과 질서에 대한 강조,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정당화이다. 극우 포퓰리스트들은 범죄와 사회적 혼란을 과장하여 ‘강한 지도자’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들은 경찰력을 강화하고, 시위를 탄압하며, 언론을 규제하고자 한다. 트럼프가 강조하는 ‘법과 질서(Law and Order)’ 구호, 필리핀 두테르테 정부의 비사법적 살인, 헝가리 오르반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오늘날 극우는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반세계화, 권위주의를 결합한 강력한 이념적 전략이다. 그 세부 양상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들을 약화시키고 파괴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현대 극우 세력은 정당, 사회운동, 온라인 커뮤니티, 초국적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로 조직되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오늘날 극우 정당은 선거를 통해 제도 정치에 진입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언론의 자유를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내부에서 공격한다. 이들 극우 정당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극우 대중운동의 존재다. 이들은 거리 시위와 직접행동을 통해 극우 정치 담론을 확산한다. 북미의 프라우드보이즈와 큐어년(QAnon), 유럽의 아이덴티테어 운동 등이 이러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인셀 및 게임 문화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온라인 극우 커뮤니티는 젊은 세대의 급진화를 촉진하며, 알고리즘과 에코 챔버 효과를 활용해 극단적 이념을 손쉽게 확산하는 통로가 되었다. 또한, 극우는 국경을 초월한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들은 전략과 슬로건을 공유하고, 정치 행사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며, 이를 후원하는 국제적인 자금망도 형성되어있다.

# 극우 부상의 원인

5 이러한 동향은 Southern Poverty Law Center(SPLC)와 같은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들은 〈Year in Hate and Extremism〉 연간 보고서와 〈Intelligence Report〉를 통해 미국 내 극우 세력의 조직 형태, 활동 패턴, 온라인 확산 전략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한편 극우의 활동 양상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유럽에서는 극우가 주로 정당 정치와 선거를 통해 제도화되어 있다면, 미국에서는 정당보다는 단체, 준군사조직이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sup>5</sup>로서 디지털 플랫폼 상에 존재했다. 주변부의 극우를 주류 정치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트럼프와 같은 정치인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들 지역에서 극우가 부상하고 있는 것일까?

극우 세력의 부상은 경제적 불안, 문화적 불안,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각 국가마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도 다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과 일자리 감소는 노동계급과 중산층의 불안을 가중시켰고, 유럽 극우 정당들은 이를 세계화와 이민자 문제로 설명하며 지지를 얻었다. 여기에 부패 스캔들과 엘리트 정치에 대한 불신이 더해지면서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반감이 극우 포퓰리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전통적인 좌우 정당의 약화로 정치적 공백이 발생하자 극우 정당은 노동계층을 겨냥한 복지 정책과 배타적 민족주의를 결합해 새로운 지지층을 형성했다.

극우 세력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제도적 허점을 활용해 지지를 확산시켰다. 소셜미디어와 알고리즘의 발달로 극우 정치인들은 주류 언론을 우회해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통해 대안 현실을 구축했다. 언론은 극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그들이 제시하는 의제를 과도하게 조명하고 쟁점화함으로써 극우 세력의 가시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즉, 극우 부상은 경제적·문화적 불안(수요)과 이를 동원하는 정치 세력,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미디어적 환경(공급)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인 셈이다.

# 미국—트럼프와 현대 미국 극우의 접점

6 미국 극우의 역사는 깊은 다층적이다. 그 흐름은 19세기 후반 쿨클릭스클랜(KKK)의 등장에서부터 1930년대 ‘미국 우선주의’ 운동, 1950년대 존 버치 소사이어티, 1980-90년대 민병대 운동까지 이어진다.

7 “트럼프는 신이 보낸 사람’이라 믿는 미국 우파 기독교인들”, <BBC>, 2024. 10. 25.

8 Mudde, C. (2022). The Far-Right Threat in the United States: A European Perspective.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99(1), 101-115.

오늘날 미국의 극우는 여러 흐름이 중첩된 형태로, 정당 정치(공화당 내 극우파), 비주류 조직(프라우드 보이즈, 오스키퍼스 등), 백인 민족주의 집단, 종교적 극우(기독교 민족주의)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6 이들은 경제적 불안, 인종적·인구통계학적 변화, 문화적 불안을 배경으로 성장했으며, 디지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가 이들의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카스 무데는 트럼프가 새로운 극우 이데올로기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2009년 티파티 운동 같은 기존의 배타주의와 우파 포퓰리즘에 더 큰 플랫폼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트럼프는 ‘순수한 대중’과 ‘부패한 엘리트’로 사회를 양분하는 포퓰리즘 전략을 활용하며 극우 정치의 동력을 극대화했다. 특히 종교적 우파, 복음주의 기독교 세력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며 자신을 “신이 보낸 사람”으로 묘사하는 서사를 적극 활용했다. 7 이러한 결합은 반이민, 반성소수자, 반공산주의 등의 의제를 강화했다.

트럼프 1기(2017-2021)는 주로 인적 교체와 상징적 정책을 통해 극우적 이념을 실현했다. 이 시기는 전통적인 공화당과 극우 정치인 트럼프의 혼재된 결합을 특징으로 한다. 8 취임 초기부터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의 입국을 금지하며 반이민 정서를 강화했고,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파리기후협정 탈퇴, 환경 규제 완화 등 국제 협력을 약화시키는 조치가 이어졌다.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까지 이어지지 않는 않았으나, 매우 보수적인 성향의 연방 판사를 대거 임명하는 등 장기적 영향력 또한 구축했다. 9

9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49년만에 2022년 연방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이 대표적인 영향이다.

반면 트럼프 2기(2025-)는 연방정부 구조조정, 국제 협력 약화, 보호무역 강화, 대규모 이민자 추방 등을 통해 미국 사회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효율부(DOGE)는 주요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필수적인 정부 기능 상실과 공공 서비스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국제 개발처(USAID) 해체와 자금 동결로 인해 수십만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와 말라리아 등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미국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러시아에 편향된 외교 정책을 채택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곤경에 빠트리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가자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축소 정책을 펼치는 등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대외 노선은 유럽이나 중동은 물론 동아시아를 포함한 향후 전세계의 안보 위기를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성소수자 권리를 포함한 다양성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후퇴도 감지된다. 최근 여성 스포츠에서 트랜스젠더 선수의 출전을 금지하거나 '두 가지 성별만 인정'하는 보건의지침을 발표하는 등 성소수자 권리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을 공격하고 해체하는 일도 극우 동원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sup>10</sup>

<sup>10</sup> "위기의 미국 민주주의...트럼프 2.0 견딜 수 있나", <경향신문>, 2025. 1. 6.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 질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트럼프 부상으로 상징되는 미국 내 극우의 주류화는 국제사회에도 상당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극우 세력에게 모델과 영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거래 중심의 지정학적 질서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환경을 조성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이처럼 전지구적인 흐름 속에 놓여있다.

# 한국 — 전지구적 유사성과 지역적 변형

11 “윤석열의 부정선거 유니버스, 그 오래된 기원을 찾아서”, <시사in>, 2025. 2. 12.

극우 정치에는 일반적인 특징이 있지만 그것이 주류화되는 과정과 동력은 사회마다 다른 경로를 따른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며 조작설을 퍼뜨렸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부정선거론도 그로부터 영향을 받았다.<sup>11</sup>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음모론이 오랜 반공주의와 긴밀하게 결합한다. 부정선거가 외부 세력(중국, 간첩, 북한)의 개입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인데, 이는 극우 정치의 또다른 특징인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다시금 강화한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반공주의는 분단 체제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한국 극우의 근본적인 토대이다. 반공주의와 결합한 ‘혐중’ 정서는 멀리는 동북공정이나 미세먼지, 가까이로는 코로나19 등의 사태를 거치며 중국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는 분노와 함께 급격히 확산되었다.

극우 폭력의 양상도 미국에서는 주로 인종주의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한국에서는 여성과 여성 공간을 표적으로 삼아 활동하는 신남성연대 등의 안티-페미니즘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온라인 급진화 역시 전지구적 현상이지만, 한국에서는 그중에서도 안티-페미니즘 정서를 기반으로 한 젊은 남성들이 극우 정치의 세계관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윤석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이들을 정치적으로 결집시켰다. 결정적으로 보수개신교의 극우화와 교회의 동원은 한국 극우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이들은 ‘기독교 국가’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며 극우적 세계관을 신앙의 문제와 동일시한다. 또, 이들은 성소수자 혐오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선동과 가부장적 가족 질서를 옹호하면서 보수 남성들의 안티-페미니즘과도 친연성을 보인다.

12·3 내란과 서부지법 폭동 이후 극우에 대한 분석이 언론과 사회 각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극우는 물론 하나의 균질한 집단은 아니며, 다양한 계보와 이념적 차이를 가진 이질적인 연합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특정한 정치적 계기를 통해 급진화된 집단과 기존의 보수주의적 성향에서 점차 극우화된 집단이 뒤섞여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조직적, 문화적, 세대적 차이도 존재한다. 그러나 12·3 내란은 이처럼 서로 다른 출발점을 가진 이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결집시켰다. ‘반국가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내란을 주도한 현직 대통령의 선동은 잠재해있던 극우의 씨앗을 틔우고, 이들을 서로 연결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3

# 한국 극우와 보수개신교

# 한국 극우의 형성

한국에서 보수적 이념이 하나의 담론으로 등장한 시기는 1990년대 중반 이후라는 견해가 많다. 해방 이후부터 노태우 정부까지 한국은 이념적 논쟁이나 담론화 없이 반공주의와 발전주의가 지배하는 ‘보수적’ 사회 그 자체였다.<sup>1</sup> 보수 이데올로기, 담론, 단체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했다. 다만 극우는 균일한 담론이나 세력이 아니며, 시기에 따라 주된 양상 또한 달라진다는 점에서 변화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때 극우가 하나의 주변적인 이념이 아니라 대중적 파급력을 갖게 되는 과정이 특히 문제가 된다.

<sup>1</sup> 이나미, 『한국의 보수단체의 이념적 분화』, 『시민사회와 NGO』 제2권 제2호, 2004년 1월, 149-188.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반공주의와 반북을 중심으로 한 극우 세력에서 중심 역할을 한 것은 주로 전현직 군 인사와 단체들이다. 물론 당시에도 동원력을 갖춘 대형 교회들이 그들이 주도하는 집회나 행사에 함께했지만 말이다. 반면 오늘날 극우 세력의 중심에 보수개신교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현재 보수개신교는 단지 극우 담론의 확산이나 인적 동원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극우의 핵심 세력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보수개신교가 반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를 중심으로 정치적 세력화에 성공해온 역사가 있다.



2005년 6월 25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북핵만대와 북한인권을 위한 국민화합대회>. 이들은 ‘북한 인권 회복’을 명분삼아 집회를 조직하여 교인들을 동원했고, 사립학교법 개정 등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했다. 출처: “한기총, 6·25집회에서 ‘북핵 포기’ 촉구”, <뉴스앤조이>, 2005. 6. 26.



# 반공주의와 역사수정주의

2 엄한진, 「한국 개신교 보수세력과 친미·극우정치 우경화와 종교의 정치화: 2003년 ‘친미반북집회’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제62호, 2004년 6월, 82-86; 제주 4.3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 서북청년단 같은 극우 폭력집단도 있었으나 이 글에서 다루는 극우 세력화의 흐름과는 논외로 한다.

3 신진욱, “뉴라이트의 국가구상 현실화되는가?”, 〈한겨레〉, 2024. 9. 3.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극우의 정치적 세력화에서 중요한 기점이 되는 때는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sup>2</sup> 당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한 보수 진영의 위기감 속에 보수의 연합전선이 형성되는 시기였다. 이를 주도한 뉴라이트는 폭넓은 보수 운동으로서 외교, 정치, 경제, 노동, 역사 인식,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파적 국가 모델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름과 달리 뉴라이트는 오래된 반공주의와 이를 강화하는 역사수정주의를 신자유주의 경제관과 결합시키는 정치운동으로, 다양한 흐름이 있었으나 결국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을 부정하는 극우 세력이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sup>3</sup> 초기 조직은 대부분 해체되었지만 여전히 핵심 인물들이 보수 단체와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권은 이들은 국가기관의 요직에 임명해왔다. 뉴라이트가 이념일 뿐만 아니라 대중운동이라는 점은 특히 중요한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보수개신교는 뉴라이트 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정치세력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2003년 1월 11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평화기도회〉에는 5만여 명이 참석했다. 2003년 1월, 효순이·미선이 사건을 계기로 끊어오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집회가 아직 한창이던 당시에 개최된 〈평화기도회〉는 반공과 반북을 나라를 위한 길로 규정했다. 이 기도회는 일차적으로 주한미군 주둔 반대 운동에 대한 반응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위기감을 느낀 세력이 결집하기 시작했음을 상징한다. 〈평화기도회〉는 이후에도 이어져 같은 해 삼일절에는 참여자가 10만 명으로 늘어났다. 4월 19일 〈반핵반김 자유통일 4·19청년대회〉, 6월 21일 〈반핵반김 한미동맹 강화 6.25 국민대회〉, 8월 15일 〈건국55주년 반핵반김 8·15 국민대회〉 등으로 유사한 집회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반핵반김’,

즉 반공주의와 역사수정주의는 극우 담론의 오래된 핵심 요소로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sup>4</sup> 보수개신교는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와 사학법 개정 반대를 중심으로 교인을 동원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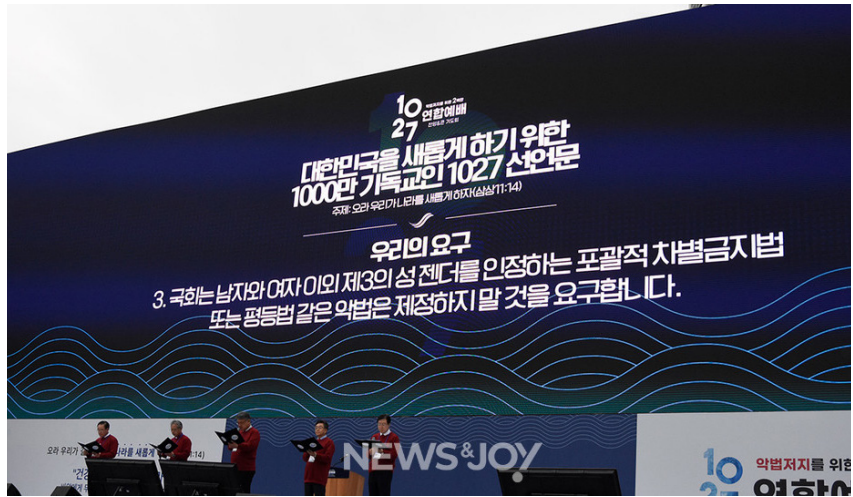
2006년 여름, <한기총>과 <재향군인회>가 공동으로 구국기도회를 열어 작동권 환수 논의 중단 등을 요구했다. 출처: “[192 사회] “전시작전권이 돌아온다””, <뉴스앤조이>, 2006. 9. 13.

한국 극우 역사관의 핵심은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다시금 불거진 ‘건국절’ 논란과 영화 <건국전쟁>의 개봉으로 다시 조명받은 뉴라이트 역사관은 앞선 ‘건국55주년’ 광복절 행사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도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을 비롯한 애국보수 계열의 극우 세력은 매해 광복절에 집중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흥범도 장군상 이전 논란, 영화 <건국전쟁>의 개봉을 둘러싼 보수-진보 학계의 충돌,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청문회에서 불거진 대한민국 ‘건국’ 시기 논란은 모두 같은 맥락에 있다. 오늘날 주요 극우 유튜브 채널 가운데 하나인 <그라운드씨>가 역사강사 황현필과 이승만 건국 논쟁으로 급부상하면서 구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현상은 단순한 유튜브 알고리즘 ‘떡상’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이는 오히려 이십 여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들의 사상적 토대가 유튜브라는 새로운 플랫폼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인 셈이다.

#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

2024년 10월 27일, 보수개신교는 서울시내 곳곳에서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열었고, 여기에는 경찰 추산 23만여 명이 참여하였다. <연합예배>를 이끈 손현보 목사는 현재 전광훈과 더불어 극우 집회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연합예배>는 2003년의 <평화기도회>처럼 구국의 결단으로 결집한 것이나 핵심 슬로건은 반공주의나 반북이 아니었다. <연합예배>의 주요 구호는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혼 반대’였다. 이러한 차이는 지난 이십 여년 간 보수개신교가 반동성애를 중심으로 정치세력화에 성공하고 보수 진영 전반의 극우화를 이끌어온 과정을 상징한다.

이 기도회는 규모에 비해 다소 갑작스럽게 준비되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네 건이나 발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과 달리, 2024년은 차별금지법에 관한 정치권의 어떠한 움직임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다. 보수개신교가 해당 기도회를 조직한 직접적인 계기는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의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판결이다. 그들은 동성결혼 법제화가 성큼 다가왔다는 위기감과 함께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의 도입을 막아야한다는 사명감으로 전국 교회를 결집시키려 했다. 이들은 말하자면 동성애와 페미니즘에 물들어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는 구국의 결단으로 거리에 나섰다.



〈10·27 연합예배〉에서 참가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주장을 함께 외치고 있다. 출처: ““짐승처럼 살려는 게 차별금지법 실제” 회개 대신 혐오·정치 가득했던 10·27 집회”, 〈뉴스앤조이〉, 2024. 11. 28.

5 <국가조찬기도회>는 1996년 군사 쿠데타를 정당화하면서 시작된 모임으로, 문재인 대통령 이전까지 역대 대통령은 관례적으로 참여해왔다. 이 모임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 왔으며, 보수개신교의 정치세력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2007년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앞장서서 저지한 것은 이처럼 정교분리를 지키지 못하는 군사독재의 유산이었다.

6 조민아, 「그대들의 '색(色)', '계(計)': 차별금지법 반대 투쟁과 '종북 게이'의 탄생을 통해 본 기독교 우파의 타자 만들기」,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기획,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엮음, 『당신들의 신국: 한국 사회의 보수주의와 그리스도교』, 돌베개, 2017, 315-342.

보수개신교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와 차별금지법안 시안 발표를 계기로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했다. <국가조찬기도회><sup>5</sup>, <성시화운동본부>, <한기총> 등 기독교 단체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저지 의회선교연합>을 결성하여 법무부를 압박했고, 결국 '성적지향' 등 7개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된 '차별적인'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다. 사학법 개정 반대 등이 촉발한 보수개신교의 정치세력화 시도는 물론 교세의 약화라는 복합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동성애라는 외부의 적은 내부를 결속시키고 동원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었다.<sup>6</sup>

전국의 교회를 동원하며 반동성애 운동을 펼쳐온 이들의 활동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균형법 92조의6 폐지 반대, 전파매개행위죄 폐지 반대로도 이어졌다. 이들은 '동성애 및 젠더교육'을 거부하며, 포괄적 성교육 도입을 반대하고,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최근에는 공공도서관에서 성교육이나 성평등에 관련한 책을 없애도록 하는 운동까지 활발히 전개 중이다. 반동성애 운동이 수그러들 기미가 없는 가운데 보수개신교 세력은 반이슬람 운동까지 적극 펼치고 나섰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대현동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주민들을 적극 지원하는 세력이 교회라는 점을 그들 스스로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7 신진욱·이세영, 『한국 정치 리부트』, 메디치, 2023, 150.

8 보명, 「한국사회 보수개신교 반동성애 실천의 담론적 확장」, 변주: '죄'에서 '중복 게이', '중독', '나쁜 인권', '젠더 이데올로기'로, 『종교와 사회』 제12권 제1호, 2024년 1월, 141-187.

전광훈이 주도하는 집회에는 위협적으로 많은 수의 사람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전광훈의 혐오 선동 및 ‘혐중’ 선동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반공주의와 반북이라는 전통적인 보수 이데올로기에 이주민, 성소수자,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 담론, 그리고 직접행동이 결합되고 확장되었다.<sup>7</sup> 2013년 차별금지법을 철회시킨 보수개신교의 공세 속에서 등장한 ‘중복 게이’라는 신조어를 시작으로, 그들은 ‘동성애독재법’과 같은 용어로 차별금지법 반대 담론을 확산시켰다. 이는 오늘날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의제에 반대하고 나서는 이들이 반공주의의 계보를 이어오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sup>8</sup> 반동성애를 시작으로 반이슬람, 반중까지 뻗어나가는 이런 공격적인 활동이 수렴하는 하나의 목표는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이다.

9 이 단락은 다음 논문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김현준, 『한국 개신교 극우 세력과 그 성격』, 『기독교사상』 제756호, 2021년 12월, 15-25.

# 반차별금지법 9 전선의 주역들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보수개신교 단체는 여전히 활동 중인 <에스더기도운동본부>(대표 이용희)이다. 본래 새터민 관련 단체로 창립되었음에도 이들은 줄곧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주력해왔다. 이들은 이승만의 ‘기독교입국론’을 신봉하며, 서울연세중앙교회와 함께 <느헤미야국가금식기도성회>를 여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신도를 조직한다. 수련회나 행사에서는 극우 인사들의 반공주의 및 반동성애 교육이 이어진다.

나아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대표 한효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대표 길원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대표 김계춘)과 같은 단체는 보수개신교를 넘어 타종교까지 포섭하며 반동성애 연합을 구축했다. 이들의 특징은 광장에 대중을 결집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직접 압력을 행사하는 데 있다. 이들은 막강한 행동력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은 물론 지역 학생인권조례와 성평등조례를 좌절시키거나 개악하며 그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다.

반동성애 선전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악법’으로 가르치는 방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반영하는 기자회견과 포럼을 주기적으로 열려왔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회장 민성길),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희, 이기복),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 등의 단체는 ‘과학’이나 ‘인권’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이념적 선봉대 역할을 맡고 있다.

2020년에는 여러 종교를 망라한 전국 17개 광역시, 498개 단체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을 설립했다. <진평연>의 대표는 법무법인 로고스를 만든 전용대 변호사로, 같은 해 창립한 <복음법률가회>가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복음법률가회>에는 현재 22대 국회의원인 조배숙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전국의 대학을 순회하며 극우 집회를 조직하고 있는 <트루스포럼>은 박근혜 탄핵 국면에 결성된 기독교 청년/대학생 조직이다. 이들은 기독교 보수주의를 정체성으로 내세우며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을 신봉하고, 반동성에 담론을 확산하는데 힘써왔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엘정책연구원>(원장 이정훈) 등도 눈에 띄게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하던 2020년 2월 당시 전광훈은 야의 집회 금지 통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회를 이어갔다. 당시 무대에 함께 오른 전광훈과 김문수. 출처: “전광훈 목사, 문재인 퇴진 집회 이어 ‘광장 예배’도 강행 “광화문 나오면 주님이 다 고쳐 주셔””, <뉴스앤조이>, 2020. 2. 23.

# 전광훈과 보수개신교의 극우화

오늘날 한국의 극우 정치에서 핵심적인 인물로는 전광훈을 꼽을 수 있다. 비주류였던 전광훈은 어떻게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고, 유력 정치인들이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이 그의 말을 따르게 만들 수 있었을까? 전광훈은 이전부터 자극적인 선동과 막말로 악명이 높았다. 2007년 대선 집회에서는 “이명박 안 찍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라며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sup>9</sup>, 2017년에는 “인류를 황폐하게 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가 대한민국을 몰락으로 몰고 간다”<sup>10</sup>며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다. 그의 정치 행보는 2019년 황교안과의 결합으로 절정을 맞이했다. 1월 15일, 황교안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고 불과 2주 후 전광훈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대표회장이 되었다. 황교안은 입당 후 한 달 만에 당 대표로 선출되며 보수개신교와의 밀착을 본격화했다.

<sup>9</sup> “이명박 장로 안찍으면 지워버릴 것...무조건 찍어”, <한겨레>, 2007. 10. 5.

<sup>10</sup> “끝 모르는 전광훈 막말-황당 발언 타임라인 정리”, <평화나무>, 2019. 12. 1.

그렇게 시작된 전광훈과 황교안의 연대는 거리 집회로 이어졌다. 2019년 광화문에서 열린 <조국 장관 퇴진 촉구 집회>와 <문재인 퇴진 철야 국민대회>에서 두 사람은 보수개신교 세력을 동원해 대규모 극우 집회를 조직했다. 전광훈은 “황교안을 세운 것은 하나님”<sup>11</sup>이라며 그를 대한민국의 차기 지도자로 기원했고, 황교안은 보수개신교의 조직력을 기반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했다. 이들은 2020년 8월 15일, <문재인 탄핵 8.15 국민대회>를 주도하며 극우 집회를 확산시켰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도 방역지침을 무시하며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고, 이는 보수개신교가 자신들의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중을 거리로 끌어내는 전략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성애 반대가 보수개신교 전반에 핵심적인 동원 수단이자 레토릭으로 자리잡으면서, 점차 극우적 성향이 교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전광훈과 같은 극단주의자들의 과격한 발언과 행동에 내부적 반감을 가지고 표면적으로 거리를 두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반대라는 공통 기조 속에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극우적 선동 방식을 묵인하거나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동성애 반대 운동이 교인들을 효과적으로 결집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현실적 효용성 때문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전광훈식 레토릭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관성 속에서 극단적인 혐오 선동과 반공주의적 세계관의 결합은 점차 보수개신교의 일반적인 특징처럼 되어갔고, 결과적으로 보수개신교 전체가 극우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2018년 8월 15일, 보수개신교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전광훈은 이날 연단에 올라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집회에는 제주 예멘 난민,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반대 구호가 쏟아졌다. 출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폭주하는 극우 개신교”, <뉴스앤조이>, 2018. 8. 15.

결국 한국에서 극우 정치가 주류화되는 과정에는 반공주의에서 출발하여 반차별·반소수자 의제를 핵심 동력으로 삼아 성장한 보수개신교가 있다. 이들은 주변부에 만족하지 않고 민주주의 제도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제도를 위협하고 파괴한다. 보수개신교는 극우 정치 세력의 사상적 지원군이자 대중 동원의 주축 역할을 초기부터 담당했으며, 보수 정당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또한 구축했다. 특히 반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은 과거 반공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에서 차지했던 강력한 정치적 동원력을 성공적으로 대체했고, 새로운 형태의 극우 정치를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시키고 있다. 2003년 <구국기도회>에서 시작된 극우의 동원은 2024년 23만 명이 참석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로 이어지고 있다.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인권은 단순히 특정 소수자 집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극우 세력의 결집을 추동하는 핵심적인 동력인 셈이다. 극우 세력화의

11 “전광훈 목사,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황교안 대표’”, <MBC>, 2019. 5. 21.

이러한 흐름과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은 끊임없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 4 정치화된 성소수자 혐오

1 Ashley Currier, *Politicizing Sex in Contemporary Africa: Homophobia in Malaw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11.

정치화된 동성애혐오(politicized homophobia)는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 등 엘리트들이 전략적으로 동성애에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사회적 위기와 연결시켜 정치적 동원의 도구로 활용하는 현상을 가리킨다.<sup>1</sup> 이는 동성애혐오가 단순히 고정된 편견이나 개인적 혐오가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활성화되고 조직되는 역동적인 사회적 실천이라는 함의를 갖는다. “정치화된”이라는 수식은 혐오의 감정과 담론이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동원되고 활성화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치 현상에는 종교와 정치 엘리트는 물론 정당, 법·제도 등 다양한 행위자가 결합하며, 혐오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수사, 관행, 정책 수립 또한 나타난다. 한국의 맥락에서 보수개신교는 교세 감소와 사회적 영향력 약화라는 내부적 위기에 직면하여 정치화된 동성애혐오를 전략적으로 채택하고 활성화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나 교리적 해석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극우 대중운동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정치화된 동성애혐오가 갖는 극우 정치적 성격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단순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혐오와 배제의 정치를 활성화한다는 데 있다. 실은 1990년대까지 한국의 보수개신교에서 동성애 문제는 핵심적인 의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교세 감소라는 내부적 위기와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이들은 해외 복음주의 개신교의 동성애혐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기 시작했다. 성서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나 레위기의 구절들은 이 시기에 전략적으로 발굴되고 재해석되어 동성애혐오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정치 담론의 부상에는 한국 사회의 급격한 가족제도 변화라는 배경과도 맞물려 있었다. 호주제 폐지, 이혼율 증가, 저출산 등 전통적 가족질서의 해체 현상을 사회적 위기로 프레임화하면서, 보수개신교는 ‘건강한 가정 지키기’를 핵심 구호로 내세웠다. 이들은 동성애가 ‘정상적인’ 가족제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 성교육이 청소년을 ‘동성애자로 만들 것’이라는 허구적 공포를 조성하며,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데 주력했다.



2003년,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이던 故육우당이 동성애를 죄악으로 내모는 보수 기독교 단체에 비판하여 자살한 사건 이후, 한국기독교청년학생연합회(한기연)은 <한기총>에 공개 사과를 촉구했으나, <한기총>은 그의 죽음이 기독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사진은 한기연이 이듬해 개최한 <강요된 침묵, 기독교 안의 동성애-입을떼다> 토론회.  
출처: “동성애든 이성애든 사랑은 무조건 축복할 일”, <뉴스앤조이>, 2004. 6. 21.

# 반공 이데올로기의 결합

한국의 보수개신교는 정치화된 동성애혐오를 한국의 특수한 맥락인 반공주의와 결합시켰다. 동성 군인 사이의 합의한 성관계를 형사처벌하는 군형법 추행죄에 대한 위헌심판 과정에서 과정에서 등장한 ‘종북게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결합의 상징적 순간이었다. 과거 ‘빨갱이’ 낙인으로 진보적 사회운동을 탄압했던 것처럼,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북한의 위협과 연결시키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한기총>과 같은 보수개신교 단체들은 이를 발전시켜 ‘동성애 독재’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냈고,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독재법’으로 규정하며 성소수자의 평등권 요구를 전체주의적 강요로 왜곡했다.

이러한 반공주의와 정치화된 동성애혐오의 결합은 군대, 학교, 가족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반대운동에서 보수개신교 단체들은 동성애 군인의 존재를 군대 기강 붕괴와 안보 위협으로 프레임화했다. 분단체제 하에서 군대, 가족, 학교(청소년)이 동성애로 ‘오염’되는 것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위협이라는 서사를 형성하는 것이다.<sup>2</sup> 이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등치시키면서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는 극우적 논리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처럼 보수개신교의 정치화된 동성애혐오는 단순한 종교적 활동이 아닌, 반공주의라는 극우 이데올로기를 동원한 정치세력화의 핵심 전략으로 기능했다.

<sup>2</sup> 김엘리, 「혐오정동과 분단된 마음 정치학」, 『한국여성학』 제37권 제1호, 2021년 3월, 191-221. 전원근, 「퀴어 디비전과 안보의 정치: 한국사회의 성소수자 정치를 독해하는 하나의 틀」,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7권 제1호, 2022년 3월, 5-41.

2000년대 뉴라이트 운동은 보수적 역사관과 시장만능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데는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대중운동으로서의 동력은 부족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운 것이 보수개신교의 정치화된

동성애혐오였다. 전국 단위 교단 연합기구와 개별 교회의 위계적 구조를 통한 강력한 동원력은 보수적 대중운동에 효과적인 기반을 제공했다. 2007년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시작으로 이들은 연이은 ‘승리’를 경험했다.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 지향’ 등 7개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민주당의 차별금지법안을 철회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차별금지법이나 성소수자의 인권을 언급하는 것이 금기시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서 효용감을 얻은 이들의 활동은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인권 제도를 무력화하고, 포괄적 성교육 도입을 저지하고, 성평등 도서를 검열하는 등 인권 제도와 성평등 정책 전반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졌다. 가령 최근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과도한 학생 자치’와 ‘교권 침해’가 쟁점화되었지만, 실제로는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보호와 성평등 교육에 대한 오랜 조직적 반대가 그 배경에 있었다. 또한, 이러한 정치화된 동성애혐오는 한국 사회 전반의 보수화와 교회 내부의 검열 강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성소수자 친화적 교회나 목회자들이 ‘이단’ 규정을 받거나 종교재판에 회부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sup>3</sup>

3 김가윤, “‘축복’ 차단하는 감리교, 종교재판이란 이름의 비이성”, 〈한겨레〉, 2024. 11. 17.



2013년 4월 19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차별금지법 발의철회 의사를 밝혔고, 보수개신교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출처: “보수개신교 공세에 차별금지법안 철회”, 〈뉴스앤조이〉, 2013. 4. 20.

# 논쟁이 된 인권

정치화된 동성애혐오의 핵심적 특징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논쟁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하며 동성애를 보호하는 인권은 ‘가짜인권’이자 ‘동성애 독재’라는 주장은 정치권의 암묵적 동조 속에 하나의 의견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sup>4</sup> 특히 2013년 당시 제1야당인 민주당 의원 5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보수개신교계의 반발로 철회된 일은 치명적인 선례를 남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소수자 인권이나 차별금지법은 정치권에서 점차 금기시되기 시작했다.

<sup>4</sup> 김중우,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담론 지형과 이중화된 인권: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과정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129호, 2021년 3월, 84-117.

2016-2017 박근혜 퇴진 집회에서 수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음에도 정치권은 보수개신교의 혐오선동에 은근히 동조하며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권변호사 출신이자 과거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 2017년 대선 TV토론회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정치화된 동성애혐오가 정치 스펙트럼을 가로질러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였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찬반’은 일종의 사상검증처럼 정치권을 맴돌았다. 이는 특정 집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들을 사회로부터 배제하려는 극우 정치가 제도권 내에서 정당성을 획득해가는 위험한 과정이었다. 이후 2020년 1건, 2021년 3건의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마찬가지로 정치권은 요지부동이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여론은 70%를 넘겼지만,<sup>5</sup> 정치화된 성소수자 혐오는 정치권에서 지속적인 힘을 발휘했다.

<sup>5</sup> “국민 70% “차별금지법 찬성”...중부세 “유지·강화” 52%-“완화” 41%”, <한겨레>, 2011. 11. 29.





2017년 대선 당시 '동성애 반대' 발언에 대해 문재인 후보에게 항의 중인 성소수자 활동가.  
출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 4. 26.

마찬가지로 주류 언론은 성소수자가 반대와 폭력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자연스러운 것처럼 다루며, 혐오 세력의 방해와 폭력을 중립적인 톤으로 보도하려 했다. 이런 보도 행태는 성소수자 혐오를 연료로 성장하는 극우 세력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았다. <10·27 연합예배>는 정치화된 동성애혐오가 극우화로 이어진 정점을 보여준다. 23만 명이라는 대규모 동원과 함께, 기독교 대안학교의 확대를 통해 “한국을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선언은 이들이 더 이상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를 넘어, 세속적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도전하는 단계로 나아갔음을 보여준다.<sup>6</sup> 12·3 내란 이후 극우 세력의 급격한 결집은 이처럼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발전되어온 정치화된 동성애혐오의 필연적 귀결이었다. 정치권과 언론이 이들의 주장을 ‘논란’이나 ‘토론이 필요한 사안’으로 다루며 정당성을 부여해온 결과, 혐오선동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된 것이다.

<sup>6</sup> “손현보 목사 “한국을 아시아 최초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 <뉴스앤조이>, 2025. 2. 18.

# 프레임 전쟁과 가짜뉴스

국내에서 정치화된 동성애혐오는 2000년대 이후 단순한 종교적 교리에서 벗어나 정교한 정치 전략으로 발전했다. ‘동성애=죄’라는 성경적 근거를 넘어 다양한 비종교적 담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교회 내부 신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한 보수적 가치관의 표현을 넘어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인권과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극우적 성격을 띤다.

보수개신교는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반공주의 정서를 활용해 ‘종북 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sup>7</sup> 군대 내 동성애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피땀 흘려 세운 나라 동성애로 무너진다”, “군 동성애 합법화하면 김정은만 좋아한다”와 같은 구호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언어는 성소수자를 국가 안보와 민족 재생산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낡은 종북 이데올로기를 결합한 동성애혐오를 국가적 위기 담론으로 확장한다. 나아가 이들은 ‘자연의 섭리’나 ‘전통적 가치’와 같은 추상적 개념과 “우리 아이들을 지키자”는 정서적 호소력이 강한 구호를 통해 도덕적 우위를 선점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러한 언어 속에서 논쟁은 도덕적 대결 구도로 치환하며, 보호와 안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운 캠페인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배제와 혐오를 정당화한다.

이처럼 보수개신교 혐오 담론의 가장 교묘한 전략은 보편적 가치를 전유하고 역전시키는 방식이다.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타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고,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 성소수자의 존재를 비가시화 하고자 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혐오표현을 정당화하는 핵심 프레임으로 활용된다.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등 보수개신교 세력은 “반대나 비판 목소리도 혐오 발언과 혐오 선동으로 매도돼 처벌하고 특정 소수자의 기분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도록 만들려는가?”라고 주장하며 차별금지법을 왜곡해왔다.<sup>8</sup>

<sup>7</sup> 이지성, 「혐오의 시대, 한국 기독교의 역할-극우 개신교의 종북게이 혐오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42호, 2018년 1월, 211-240.

<sup>8</sup> <동성애·퀴어축제반대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동성애혐오와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을 담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출처: “차별금지법 발의 이어 국가인권위 ‘평등법’ 입법 권고...” 혐오 표현도 괴롭힘”, <뉴스앤조이>, 2020. 7. 1.



<동성애·퀴어축제반대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동성애혐오와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을 담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출처: “차별금지법 발의 이어 국가인권위 ‘평등법’ 입법 권고...” 혐오 표현도 괴롭힘”, <뉴스앤조이>, 2020. 7. 1.

9 김중우,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담론 지형과 이중화된 인권: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과정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129호, 2021년 3월, 84-117.

10 김보명, 「한국사회 보수개신교 반동성애 실천의 담론적 확장과 변주: ‘좌’에서 ‘중복 게이’, ‘중독’, ‘나쁜 인권’, ‘젠더 이데올로기’로」, 『종교와 사회』 제12권 제1호, 2024년 1월, 141-187.

11 이나영·백조연, 「〈성과학연구협회〉를 중심으로 본 ‘개신교’ 동성애 ‘혐오담론’」, 『여성학연구』 제27권 제1호, 2017년, 67-108.

12 김보명, 위의 글.

보수개신교 단체들은 인권 담론을 전유하여 혐오에 활용한다. “진짜 인권 말살하는 가짜 인권법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역차별 조장법”과 같은 구호는 성소수자와 인권 개념을 담론적으로 분리하고,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가짜 인권’으로 규정한다.9 더 나아가 이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역차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차별금지법이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해자 서사의 전복은 보수 기독교인들이 성소수자에 의해 ‘박해’받는 왜곡된 구도를 만들어낸다.10

더욱 교묘한 전략은 종교적 혐오를 과학적 객관성으로 포장하는 방식이다. 2014년 설립된 <한국성과학연구협회>와 같은 단체들은 동성애 담론을 ‘잘못된 과학’과 ‘올바른 과학’으로 이분화했다.11 이들은 동성애의 선천성을 지지하는 연구는 ‘잘못된 과학’으로 분류하고, 재생산 목적의 이성애만을 ‘자연의 질서’로 규정하며 기독교적 성윤리에 ‘과학적’ 권위를 부여한다.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치료 가능하다”와 같은 구호들은 동성애를 후천적 ‘선택’이나 ‘중독’으로 규정하고 ‘치료’와 ‘회복’의 대상으로 만든다.12 실제 현대 의학계의 합의와는 동떨어진 이러한 주장들은 ‘과학’이라는 외피를 통해 대중적 설득력을 획득한다.

정치화된 동성애혐오의 프레임 전쟁에는 가짜뉴스의 유통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중심에는 <에스더기도운동>과 같은 기독교 단체가

13 “동성애·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의 이름, 에스더”, <한겨레>, 2018. 9. 27.

있다. <에스더기도운동>은 이용희 목사가 2007년 만든 기독교 우파 단체로, 대규모 ‘인터넷 사역자’와 ‘미디어 선교사’를 양성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확산시키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에스더 내부자들에 따르면 “인터넷 사역자와 미디어 선교사의 핵심 역할은 댓글을 달고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것”이며, “이용희 대표를 정점으로 한 기획실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한다.<sup>13</sup> 특히 ‘미디어 선교’라는 명목으로 성소수자 혐오, 북한 관련 안보 위기 강조, 특정 정치인 관련 부정적 게시물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댓글부대’를 운영해왔다.

12·3 내란 이후 가시화된 극우 세력의 배경으로 유튜브의 극우 채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혐오에 기반한 가짜뉴스가 성공적으로 정치화된 동성애혐오를 동원해온 역사를 고려하면, 극우 유튜브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기존 가짜뉴스의 플랫폼 변화에 가깝다. 포털 뉴스 댓글과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시작한 혐오의 가짜뉴스가 이제는 유튜브 채널로 이동했을 뿐, 그 내용과 언어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이들 채널에서 사용하는 ‘위기’, ‘침략’, ‘전쟁’, ‘수호’와 같은 언어적 프레임은 과거 <에스더기도운동>과 같은 단체가 사용하던 것과 동일하다. 12·3 내란 이후 급부상한 극우 유튜버들이 마치 새로운 세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온 혐오 담론 생태계의 최신 변형일 뿐이다. 이처럼 유튜브 플랫폼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혐오 담론의 핵심 언어와 프레임은



2019년 8월 경기도청 앞 도로에서 열린 <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개정 촉구 도민대회> 참석자들이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라는 피켓을 들어보고 있다.  
출처: “[교회를 떠나 교회가 되다] © 뜰교회(상)”, <뉴스앤조이>, 2023. 6. 5.

# ‘젠더 이데올로기’

일관되게 유지되며 한국 사회의 극우화를 촉진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동성애혐오를 정치화하는 데 성공한 보수개신교는 트랜스혐오를 중심으로 한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프레임을 통해 성평등 정책 전반으로 공격 대상을 확장해왔다. <바른여성인권연합>과 같은 단체들은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를 주장하며 생물학적 성별 이분법에 기반한 보수적 여성 정체성을 옹호한다. 이 슬로건에는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복수의 젠더 정체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젠더 이데올로기’ 담론은 보수개신교의 전통적인 성소수자 혐오를 여성에 대한 옹호로 둔갑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성평등 교육을 이념 주입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조기 성애화로 규정하며,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여성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한다. 안티페미니즘과 성소수자 혐오가 결합하면서 보수적 ‘양성평등’이 ‘진정한 여성인권’으로 재정의되는 것이다.<sup>14</sup> 트랜스젠더 혐오 정서를 동력으로 하는 TERF(Trans-Exclusive Radical Feminism)가 보수개신교와 정치적으로 공명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sup>15</sup>

<sup>14</sup> 김보명, 위의 글.

<sup>15</sup> 나영, 「지금 한국에서, TERF와 보수 개신교계의 혐오선동은 어떻게 조우하고 있나」, 『문화/과학』 93호, 2018년 3월, 50-72.

한편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반트랜스 담론은 국제 극우 네트워크의 전략적 선동이 한국까지 확산된 영향이기도 하다. ‘젠더 이데올로기’ 프레임은 1990년대 가톨릭 교회 내 논의에서 시작되어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의 성평등 이니셔티브에 대응하기 위한 바티칸의 적극적 개입으로 발전했다. 이 개념이 성평등과 성소수자 권리에 반대하는 담론적 도구로 자리잡으면서, 2000년대에는 동성결혼, 2010년대 이후부터는 트랜스젠더 이슈를 공격하는 전략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의 전지구적 확산에는 러시아 정부와 정교회나 미국의 Alliance Defending Freedom(ADF) 같은 보수기독교

16 European Parliamentary Forum for Sexual & Reproductive Rights. Tip of the Iceberg: Religious Extremist Funders against Human Rights for Sexuality and Reproductive Health in Europe 2009–2018. Brussels: EPF, 2021.

17 “트랜스젠더 가짜뉴스 퍼뜨리는 보수개신교... ‘괴물 혐오’ 조장”, 〈한겨레〉, 2024. 11. 4.

단체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EPF 분석에 따르면, 2009-2018년 유럽 지역 반젠더 활동에만 1억 8,600만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자금이 투입되었다.<sup>16</sup> 이러한 국제 네트워크의 영향이 영국에서는 법적 성별변경의 기준을 완화하는 성별인정법 개정에 대한 극렬한 반대운동을, 미국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지우는 미국의 반트랜스 행정명령과 같은 정책적 시도로 변형되고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발전한 트랜스젠더 혐오 담론은 여성 스포츠, 여성 안전, 아동 보호 등에 관한 특유의 ‘조작된 서사’를 만들어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담론이 보수개신교와 극우 세력에 의해 수입·전파되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화장실 등 성별 분리 공간에서 여성과 아동의 안전이 위협된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트랜스혐오를 활용해 자신들을 여성 인권의 수호자로 위장한다.<sup>17</sup> 트랜스젠더를 위협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혐오담론은 몇 년 전 숙명여대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집단적 괴롭힘과 입학 저지라는 극심한 차별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국제적 담론이 초기 이데올로기 틀을 제공했지만 한국의 보수개신교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 맞추어 교묘하게 이를 확산하고 있다.

5

위협받는  
평등,  
무너지는  
민주주의

# 광장에 나온 극우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난 폭동 사태를 지켜보는 우리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많은 이들은 헌법기관이자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극우 세력에게 철저히 유린되는 모습을 보며 민주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무엇에 충격을 받은 것일까? 아마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헌법기관을 통해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무너진 데 대한 충격일 것이다. 분명 서부지법 폭동세력은 민주사회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헌법기관을 지키던 경찰이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폭동 주도자 일부는 윤석열의 구속을 결정한 판사를 살해할 의도까지 드러냈으니 말이다.

그러나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극우 세력은 성소수자들에게는 낯선 얼굴이 아니었다. 이들의 폭력성 역시 새롭지 않았다. 지금 기승을 부리는 극우 세력은 반동성애, 반이슬람, 좌파척결,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구호 아래 성장해온 보수개신교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소수자들은 오래전부터 보수개신교의 폭력성을 직접 목격해왔다. 어떤 면에서 서부지법 폭동은 우연적이거나 예외적인 사건이라기보다, 보수개신교가 극우화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를 비롯한 여성, 이주민, 난민에게 쏟아냈던 폭력이 12·3 내란이라는 계기를 맞아 모종의 비장함과 결합하여 대담하게 행해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보수개신교는 오랫동안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적인 양상으로 진화해왔다. 민주주의 제도가 극우 세력의 난동으로 훼손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성소수자를 비롯하여 평등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은 차별금지법이나 평등에 관한 정책 마련을 위한 공론장이 극우 세력의 난입과 폭력에 의해 무력화되는 상황을 오래 전부터 목도해 왔다. 이들은 민주적 과정을 부정하고 방해할 뿐 아니라, 기독교 국가 건설을 주장하고, '반국가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으며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





〈세이브코리아〉 주도로 2월 8일 대구에서 개최된 탄핵 반대 집회  
출처: 세이브코리아, 2025. 2. 8.

2025년 2월 16일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1만 명 규모의 극우 집회가 열렸다. 강기정 광주시장인 한 차레 5. 18. 광장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던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해당 집회를 주관했다. 민주화의 상징적 공간인 광주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이는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극우 세력의 준동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같은 날 탄핵 찬성을 외치는 2만여 명의 광주 시민들의 집회가 개최되었고, 다행히 두 집회는 직접적인 충돌없이 마무리되었다.

〈세이브코리아〉는 이후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을 순회하며 세를 높이고 있다.<sup>1</sup> 이러한 극우 집회를 주도하는 이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이다. 그는 오랫동안 광화문 집회를 이끌어 온 전광훈과 달리 최근엔야 정치적으로 부각된 인물이다. 손현보 목사가 극우 진영의 새로운 리더로 떠오른 결정적 계기는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이었다. 그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반대를 핵심 의제로 내세워 〈10·27 연합예배〉를 조직했고, 이를 통해 극우 진영의 중심인물로 급부상했다.<sup>2</sup> 차별금지법 반대를 통해 모인 세력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탄핵 반대로 집결하는 모습은 극우 세력이 혐오와 차별을 기반으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sup>1</sup> “제2의 전광훈’ 손현보, 전광훈보다 위험하다”, 〈한겨레〉, 2025. 3. 1.

<sup>2</sup> “10·27 차별금지법 반대 연합예배 주도한 손현보 목사”, 〈월간조선〉, 2014. 12.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으로 세력을 결집한 보수개신교는 차별금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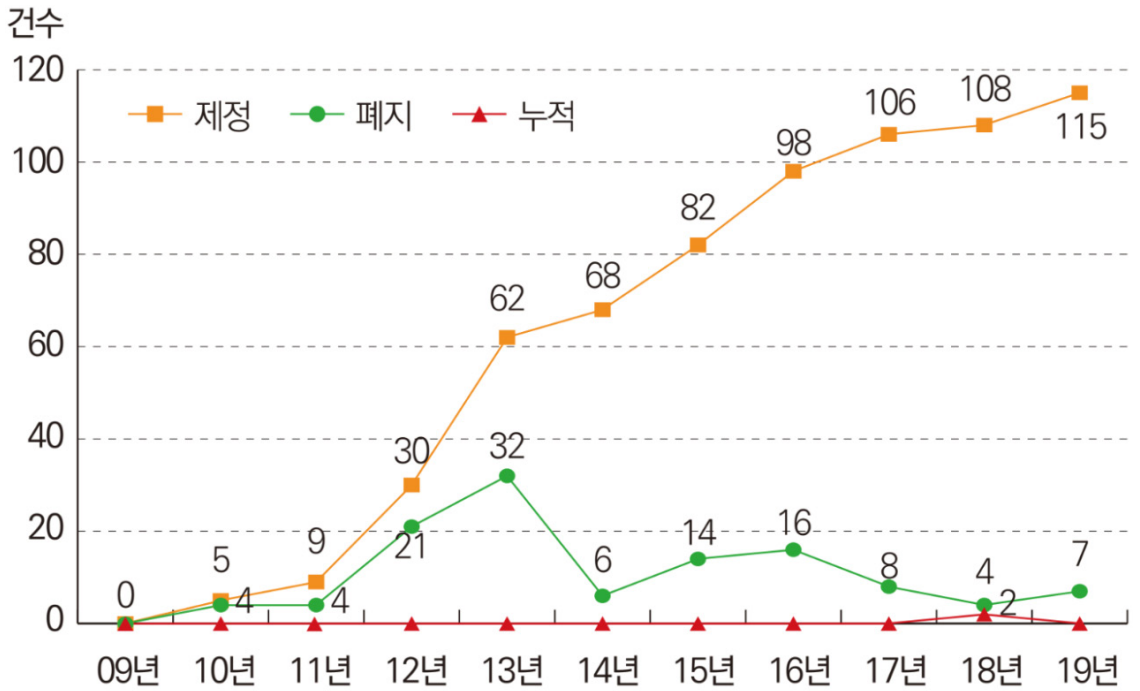
# 인권 제도의 무력화

반대에 머무르지 않고 인권 및 성평등에 관련한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인권교육지원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인권 관련 법안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또한 줄줄이 철회되거나 제정이 무산되었다. 이제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법령이 ‘동성애 조장’, ‘유사 차별금지법’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좌절되거나 개악되고 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면서 전국적으로 인권조례 제정이 활발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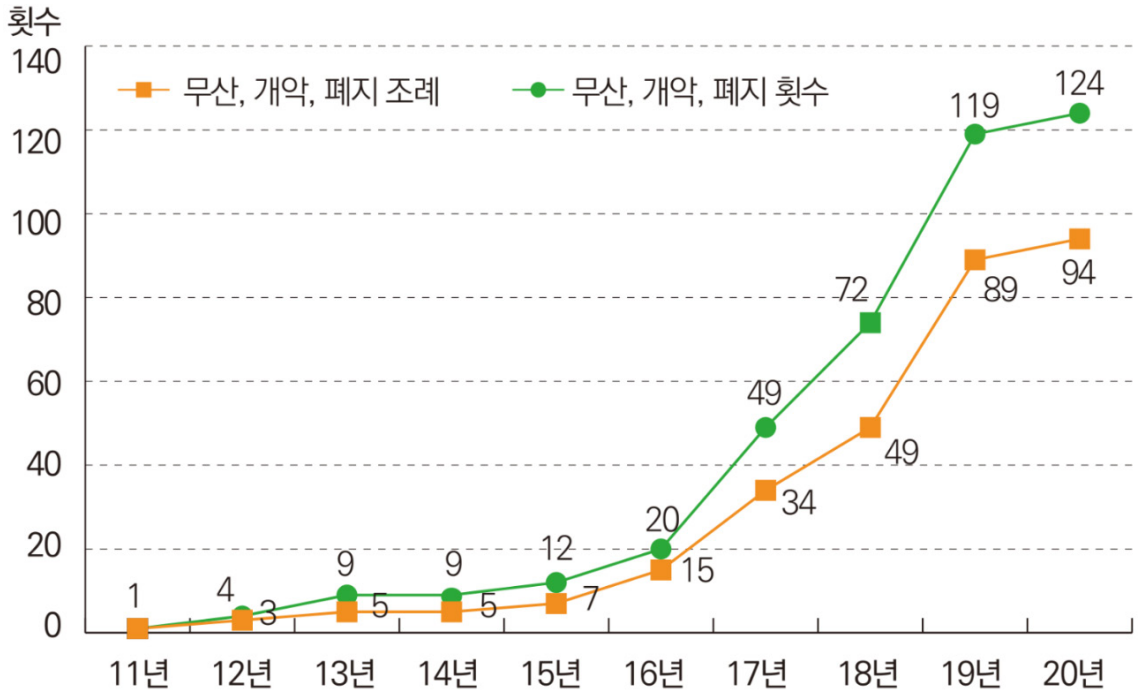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둔화되기 시작한다. 특히 2017년 보수개신교 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대운동으로 인권조례 제정이 크게 어려워졌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반대와 같은 맥락에서 ‘동성애 조장’과 같은 왜곡된 주장을 펼치며 지방의회를 압박했다. 그 결과 인권조례의 신규 제정은 크게 감소했고, 이미 존재하는 조례 또한 개악되거나 폐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sup>3</sup> 최근 사례로는 2024년 충청남도과 서울시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sup>3</sup> 시우, 「성소수자 혐오에 따른 인권정책의 무력화: 인권조례를 중심으로」, 『비온뒤무지개재단 연구용역보고서』, 2020년.

이들은 단순히 특정 법안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민주적 절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와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2014년 서울시는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추진했다. 이는 서울시민이 차별없이 누릴 인권을 규정한 선언문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개신교 집단은 강력히 반발했다. 그들은 헌장 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조항이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결국 2014년 11월 20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서울시민 인권헌장(안) 공청회>는 보수개신교계와 반동성애 단체들의 조직적인 난입으로 무산되었다. 이들은 주최 측과 참석한 시민들을 향해



시기별 인권조례 제정·폐지 현황 및 누적 현황. 출처: 시우, 위의 글, 17.



시기별 인권조례 제정·폐지 현황 및 누적 현황. 출처: 시우, 위의 글, 31.

4 “보수단체 난입으로 무산된  
서울시민 인권헌장 공청회”,  
〈미디어오늘〉, 2024. 11. 20.

고성과 욕설을 퍼붓고 마이크를 강제로 탈취하는 등 공청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sup>4</sup>

이러한 민주적 공론장의 파괴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2022년 교육과정 개정에서 보수개신교 세력이 집단적으로 참여해 고성과 야유로 회의를 방해했던 것도 대표적이다. 일부 참가자들은 발표자에게 ‘민주시민’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고 고함을 지르며, 이 용어가 동성애 옹호를 위한 용어이므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교육부의 초청으로 참가한 한 토론자는 이슬람 등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는 내용도 삭제되어야 한다며, 성경이 아닌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교육이야말로 동성애자들이 한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드려는 시도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나름대로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던 교육과정 개편안은 결국 퇴행적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며 변질되었다.

공청회와 같은 숙의 민주주의 과정은 단순 다수결 투표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열린 토론을 통해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주의의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방법론이다. 이러한 숙의의 장이 평등에 반대하고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 의해 반복적으로 무력화된 것은 이미 극우 세력에 의해 민주주의 기반이 심각하게 침식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였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이러한 위험 신호를 간과했다. 정치권의 외면과 동조 속에서 세력을 확장해 온 극우 세력은 마침내 민주주의 제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협하는 위협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새로운 현상이 아닌, 십수 년간 축적되어 온 혐오정치의 필연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 퀴어문화축제를 향한 폭력

차별금지법 반대를 중심으로 결집한 보수개신교 세력은 퀴어문화축제도 방해하고 나섰다. 특히 2014년 신촌 퀴어문화축제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보수개신교 세력은 축제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확산하며 서대문구에 축제 개최를 막으라는 압박을 가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세월호 추모를 명분으로 내건 반대 집회를 열고, 일부는 몸을 던져 행진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기까지 했다. 축제 참가자들은 밤까지 대치한 끝에 겨우 행진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런 명백한 집회 방해 행위에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조직적 방해는 매년 반복되었다.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보수개신교의 방해 공작과 집회가 따라왔다.

이러한 방해가 절정을 맞은 것은 2018년이었다. 2018년 9월 8일 동인천역 인근, 대낮에 많은 사람이 오가는 거리와 광장에서 성소수자들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그곳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는 준비 단계부터 조직적인 방해 행위로 무대와 부스 설치조차 불가능했다. 심지어 축제 참가자들이 만나질 넘게 한 장소에 갇히다시피 했고, 그곳을 벗어나려고 시도하면 밀치기와 욕설이 쏟아졌다. 혐오 세력은 인천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이니 더러운 너희들은 떠나라는 말을 반복했다. 장애인을 발견하면 장애를 조롱하고 휠체어를 흔들거나 장애인은 집이나 있으라며 모욕을 주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혐오 발언 속에서 축제 참가자들은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맞고, 발에 걸려 넘어져 다리에서 피를 흘리기도 했다. 참가자들이 들고있던 깃발과 깃대는 빼앗기고 찢겨졌다.

이 모든 상황에서 경찰은 오히려 반대자들이 너무 강경하니 축제를 취소하자며 축제 측을 종용했다.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명백한 폭력 행위가 벌어졌음에도, 현행법 체포 등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예정된 행진 시간이 되어 길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에도 수백 명의 혐오 세력은 길을 막은 채 욕설을 퍼부었다. 경찰은 수 시간 동안 방관하다가 행진이 진행되고 뒤늦게 혐오 세력을 물리적으로 밀어냈으나, 이내 지쳐 멈추었다. 그 지점은 하필 좁은 골다리 밭이었다. 밀폐된 공간의 위험성을 인지한 축제 측은 하는 수 없이 깃발을 내릴 테니 행진 마무리 공간까지 이동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깃발을 내린 축제 참가자들에게 혐오 세력은 “우리가 이겼다”며 승리감에 취한 욕설을 계속했다.

혐오 세력의 집단행동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임에도 경찰은 단 한 명도 체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경찰은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축제 참가자들을 비난했다. 행진 마무리 지점까지 가는 동안에도 경찰의 보호는 없었고, 혐오 세력은 축제 참가자들 바로 옆에 따라붙으며 인천에서 나가라고 고함쳤다. 그 이후 축제 측에서는 폭력행위를 주도한 이들을 고소·고발했으나, 수사기관은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전부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동성애·퀴어축제반대 국민대회 참가자가 '퀴어 축제 반대'라는 슬로건을 들고 있다. 출처: “[퀴어 문화 축제 방해 잔혹사] ① 무지와 편견에 기반한 혐오의 이유”, <뉴스앤조이>, 2023. 6. 27.

이후로도 퀴어문화축제와 성소수자 관련 행사들은 공공기관에 의해 개최 자체를 방해받거나, 대관을 불허하는 등 행정적인 차별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 보수개신교의 지속적인 폭력과 방해가 행정적으로 정치화된 것이다. 2023~2024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서울 시청광장에서 개최되는 것을 불허했고, 2023년 홍준표 대구시장은 주말에 공무원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감행하면서까지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무산시키려고 했다. 2018년 퀴어여성네트워크에서 체육대회를 위해 서울 동대문구체육관을 대관했다가 미풍양속을 해친다며 돌연 취소한 사건도 있었고, 2023년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지방자치기구에서 혐오에 기반한 민원을 이유로 성평등 도서 폐기를 도서관들에 권고하여 도서가 폐기되는 일도 있었다. 거대양당의 한 측은 보수개신교를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한 측은 외면하고 묵인하는 이 반복 속에서 보수개신교는 보수정치의 주류로 성장할 수 있는 정치적 조직과 경험을 비축했다.

# 민주주의의 갈림길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극우 세력이 12·3 내란 이전부터 인권과 평등을 왜곡하고, 혐오와 차별 선동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공격해왔음에도 정치권이 이를 외면해왔다는 데 있다. 이는 극우 세력과 결탁하여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극우 세력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성소수자 인권과 차별금지법에 관해서는 유사한 태도를 보이는 흐름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2025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역임했던 주철현 의원(여수 갑)은 전남도당 당원들에게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적이 없고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주 의원이 타이르고자 했던 개신교 목사들은 전광훈을 비롯하여 극우화된 개신교의 흐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

**5** “‘극우 구심점’ 전광훈에 엇갈린 개신교계...”부끄럽다”, “동성애 막은 분”, <뉴스1>, 2025. 2. 5.

결국 이와 같은 정치권의 태도는 극우 세력의 핵심이 된 보수개신교의 책임을 묵인하고 용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치권의 묵인 아래,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하며 공존하는 방식을 추구하기보다 동조자만 결집하고 반대 세력을 ‘적’으로 규정하여 폭력 등 비민주적 방식으로 제거하려는 극우사상이 보수개신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 민주주의 시스템 파괴의 위험한 갈림길에서 한국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할 때이다.



6

# 합우의 연쇄와 외부의 적

# 협오와 협오 사이— 더러운 커넥션

2025년 2월 5일, 60개 낙태 반대 단체의 연대체인

1 ““현재, 낙태법 개정  
침묵하면서 재판관 임명만  
압박?”, <크리스천투데이>,  
2025. 2. 5.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sup>1</sup>

이들은 <2030 청년연합> 외 825개 단체와 함께 관련 성명서를  
이틀날 <매일경제> 1면 광고로 게재했다. 이 성명서의 핵심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일관성 없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었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2019년 4월 11일 헌재 판결을 무시하고 5년이 넘도록  
낙태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침묵했던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곧바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일이라고 별도 성명을 낸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sup>2</sup>

2 “뻔뻔하고 이중적이며  
불공정한 헌법재판소를 강력  
규탄한다”(광고), <매일경제>,  
2025. 2. 6.

임신중지에 관한 입법공백이 5년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은  
본래 많은 여성단체 및 인권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였다.  
그러나 극우세력이 이 논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과  
‘우리법연구회’ 등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용하면서, 마치 이들과  
인권단체의 비판지점이 일치하는 것 같은 착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정치적 맥락에 따라 동일한 논리가 전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임신중지 반대 주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연대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역행하는 낙태법  
개정안을 입법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로부터 약1년이 지난 2020년 9월 전후에 출범한  
것으로 보이는 이 단체는 <기독교사회>, <기독교생명윤리협회>,

##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연대 단체(60개)

올바른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생명존중낙태법개정시민연대,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입양가족연대, 한국기독교사회, 바른교육교수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경남미래시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한미역사문화연구원,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아름다운피켓, (사)무지개, 더사랑다음세대연구소,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밝은청년여성연합, 새생명사랑회, 생명운동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올(ALL)바른인권세우기, 세움학부모연합, 엄마방송 여성정책협의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인카스해외입양인지원협회, 자유와인권연구소, 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 주사랑공동체, 청주미래연합,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GMW연합, 태아사랑운동연합, 프로라이프 대학생회, 한국미혼부지원협회,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카도쉬아카데미, 자유남녀평등연합,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한국고아사랑협회, KHTV, 아빠의품미혼부단체, 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년연합, 가톨릭세계복음화CPE선교회한국지부,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한국성평화연대, 전국학생수호연합,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참인권청년연합, 꿈키움성장연구소, 카일생명존중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4-040262 | 예금주 : 행동하는프로라이프

## 진행 순서

사회: 전해성 공동대표(행동하는프로라이프)

### | 개회식 |

- 개회 선언 \_ 사회자
- 국민의례
- 개회사 \_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 환영사 \_ 조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 환영사 \_ 이봉화 상임대표(행동하는프로라이프)
- 격려사 \_ 오정호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장)
- 축사 \_ 한동훈 당 대표(국민의힘)
- 축사 \_ 추경호 원내대표(국민의힘)
- 축사 \_ 인요한 최고위원(국민의힘)
- 축사 \_ 강문구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생명존중위원회 위원장)

- 사진 촬영 -

### | 발제 |

1. 발제1 18  
국내 태아생명보호 운동의 역사, 향후 방향, 정부에 바라는 내용  
\_ 장지영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건진외과)
2. 발제2 41  
교계가 바라보는 태아생명보호 방안, 교회가 입법에 대해 정부에 바라는 내용  
\_ 이상원 상임대표(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전 총신대 교수)

### | 토론 |

1. 토론1 72  
모자보건법 개정 방안 \_ 홍순철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2. 토론2 86  
미국의 태아생명운동의 역사와 교훈 \_ 조평세 박사(1776연구소 소장)
3. 토론3 93  
낙태법 개정 방안 \_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Y)

### 질의응답 및 플로어 토론

3 “낙태죄 입법시한 4개월... 찬반논쟁 “앗 뜨거워!””, <한국기독교공보>, 2020. 9. 17.

<성산생명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보수개신교계에서 본격적으로 임신중지 반대 운동과 법정책 로비 활동을 위해 조직된 연대체이다.<sup>3</sup>

이 단체는 단지 ‘낙태죄 반대’라는 한 가지 사안만을 중심으로 결집한 것이 아니다. 2024년 8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우리 사회의 태아생명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집에 나타난 소속 단체의 목록은 동성애·동성혼·차별금지법 및 페미니즘 반대 운동의 혐오 네트워크를 망라한다. 대표적으로 혐오에 기반한 가짜뉴스 유포를 주도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리를 부정하는 낙태 반대 운동을 펼치던 <에스더기도운동>과 God, Man, Woman의 약자로 최근 손현보 목사의 <세이브코리아> 집회에 결합하고 있는 <GMW연합>이 있다. 또한 ‘교육’, ‘학부모’, ‘미래세대’ 등을 단체명에 내세운 단체들, 그리고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와 같이 버젓이 차별금지법제정 반대 입장을 단체명에 명시한 단체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행사에는 국민의힘의 조배숙·조정훈 의원이 세미나 공동주최자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한동훈, 추경호, 인요한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핵심 인사들이 축사자로 대거 참석하며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는 보수개신교 세력과 보수 정당이 형성한 혐오 기반 네트워크가 내란 사태 훨씬 이전부터 견고하게 구축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 협력 구도 속에서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담론이 체계적으로 생산되고 확산되며, 두 세력 간의 정치적 공생관계가 장기간 공고화되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한기총>에 ‘인구 교육 추진 사업’ 명목으로 5억여 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기총은 이 예산으로 ‘저출산 극복’이라는 명분하에 동성애 반대, 정관수술 금지, 여성에게 출산 책임을 전가하는 메시지를 확산시켰다.<sup>4</sup> 이러한 지원이 시작된 시점은 보수개신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 시기와 일치한다. 이들의 활동은 단순히 임신중지 반대에 그치지 않고, 전통적 성역할 강화와 결혼·출산의 의무화를 주장하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민주시민 교육이나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보편적 권리 보장에 체계적으로 반대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 왔다.

4 “[한국교회의 저출산 대응, 사업인가 사역인가] 혐오차별 조장에 사용된 저출산 예산] © 한기총 ‘인구 교육’ 명목으로 정부에서 15년간 5억 지원...세미나에선 “정관수술 복원해야”, <뉴스앤조이>, 2025. 3. 5.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국회의 낙태법 개정 지연에 대한 비판과 윤석열 퇴진 반대라는 겉보기에 무관해 보이는 정치적 입장을 교묘히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선택적 논리 활용은 혐오의 네트워크가 서로 다른 문제를 연결하면서 극우 정치를 결집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들의 극우-혐오 세계관은 각 분야에서 서로를 강화하며, 한 영역의 혐오는 다른 영역의 극단주의와 연쇄하며 서로를 강화한다.

# 외부의 적 만들기

한편 보수개신교는 2008년부터 조직적으로 무슬림과 좌파의 연대에 의한 ‘한국의 이슬람화’라는 음모론을 퍼뜨려 왔다. 이런 이슬람에 대한 공격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한국 개신교인 23명이 탈레반에 의해 납치되고 2명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 사건은 샘물교회 선교자들이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험 지역에 진입했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노무현 정부가 나서 이들을 구조한 뒤에도 개신교에 대한 비난 여론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에 일부 교회에서는 오히려 무슬림 혐오를 적극적으로 퍼뜨려 여론에 대항하기 시작했다.



2016년 3월에 열린 이슬람 반대 집회.  
출처: ““무슬림이라서...” 예멘인 돕기 주저하는 이슬람 선교 단체”, <뉴스앤조이>, 2018. 7. 4.

이런 무슬림 혐오는 단지 개신교에 대한 반감에 대항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무슬림 자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방해공작이다. 2021년 준공 예정이었던 이 사원은 극우개신교 세력의 적극적인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들은 사원 건축현장 앞에서 이슬람 문화에서 금기시되는 돼지머리, 돼지고기 파티를 주기적으로 벌였으며, 2025년 현재도 지속적인 모욕과 지자체의 방치 속에 건축이 중단된 상태다. 경기 연천군에서도 2020년 유사한 이유로 이슬람 사원 건축이 무산되었다.

보수개신교는 다양한 인종과 국적, 종교적 믿음을 한국 사회 바깥으로부터 온 위협으로 규정하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이들은 이슬람 전체를 테러와 연결된 것으로 무분별하게 일반화하며 무슬림을 한국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묘사한다. 이러한 담론은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당시 500여 명의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입국했을 때, 보수개신교 세력은 이들 중 다수가 무슬림 남성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가부장적 이슬람 문화가 한국 여성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공포를 조직적으로 확산시켰다. 이와 같은 안전 담론의 전략적 활용은 특정 종교와 인종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했다.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2020년 당시 전광훈 등은 문재인 퇴진 집회를 이어갔고, 광화문광장 한쪽에서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가 진행됐다. 출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위기에도 ‘문재인 퇴진 집회’...전광훈 “나는 선지자, 성경 전부 암송””, <뉴스앤조이>, 2020. 2. 2.

최근의 중국인 혐오 선동은 과거부터 누적된 복합적인 반중 정서의 연장선상에 있다. 동북공정과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으나,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러한 정서는 더욱 심화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자, 극우 세력은 이미 존재하던 반중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문재인 정부를 ‘친중 좌파정부’로 규정하고 중국과의 왕래를 즉각 봉쇄하지 않았다며 비난했다. 이들은 백신 의무접종에 반대하고 음모론을 퍼뜨리며 물리적 거리두기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중국인 혐오는 극우세력 결집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고, 최근에는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중국인으로 몰아세우는 정치적 선동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이러한 혐오 표현과 폭력성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23년 <자국민보호연대> 박진재 대표는 대구에서 외국인 밀집 지역을 다니며 외국인들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22대 총선에 출마했으며, 이주민이 선주민의 생계를 빼앗고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는다는 주장을 펼치며 폭력을 자행했다. 박진재는 처벌받았지만, 극우세력의 최근 행보를 고려할 때 이주민과 외국인을 향한 혐오와 폭력이 앞으로 어떻게 확산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 혐오의 연쇄를 끊어내기

혐오정치는 단일 대상에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한다.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새로운 혐오 대상을 창출하고 기존 대상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극우세력 형성의 토대는 반공주의에 보수개신교의 성소수자 혐오를 결합하면서 확장되어 왔다. 이러한 가부장적 네트워크는 '전통적 질서'라는 명목 하에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이주민과 외국인을 '민족적 순수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연쇄적 혐오 정치를 형성한다. 정치권과 공권력이 혐오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을 묵인하는 동안, 극우세력은 이 혐오의 연쇄작용을 통해 세력을 확장해왔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혐오 앞에서, 어떤 혐오는 용인하고 어떤 혐오는 배척하는 선별적 접근을 취한다면, 극우세력은 그 틈새를 파고들어 더 강력한 영향력을 확보할 것이다. 한 형태의 혐오를 허용하는 순간, 그것은 다른 혐오와 차별로 확장되는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진정한 내란 종식과 극우 극복을 위해서는,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등을 향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혐오에 함께 맞서는 교차적 연대의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기  
원  
하  
는  
기  
간  
에  
이  
의  
사  
유  
가  
없  
는  
한  
대  
에  
이  
의  
사  
유  
가  
없  
는  
한  
대  
에  
이  
의  
사  
유  
가  
없  
는  
한  
대  
에

12·3 내란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가 촉발한 정치적 혼란에 극우 세력, 종교 지도자, 온라인 커뮤니티, 정치권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집하고 서로 연합하면서 극우의 ‘주류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2·3 내란이 일회적인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장기적인 도전임을 분명히 한다.

현재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은 단지 전광훈과 같이 혐오와 극단주의, 음모론을 내세우며 세를 확장해온 전통적 극우 인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제도 정당의 정치인들도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론에 동조하고 있으며, 반페미니즘 정서를 공유하던 2030 보수 남성들 또한 이 흐름에 합류하였다. 조회수를 노리고 자극적인 선동과 가짜뉴스 확산에 앞장서온 극우 유튜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민주주의 수호의 보루 또한 내란에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들 세력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확산시키는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결국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각자의 협소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전략했다는 사실이다.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치권의 묵인 하에 성장해 온 보수개신교가 어떻게 이합집산하여 지금의 극우 네트워크를 형성했는지를 살펴본다.



코로나19 시기 반정부 집회를 주도하며 세를 과시했던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출처: “교회의 진정한 힘은 동원된 세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뉴스앤조이>, 2024. 10.24.

# 내란의 선동자— 변방 목회자의 광화문 수익모델

12·3 내란 직후 여당보다 먼저 내란을 옹호한 인물이 있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광훈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광훈TV> 라이브 방송에서 “너무 잘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나아가 그는 “5천2백만 국민들은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하고 함께 뜻을 합하여 대통령이 추진하는 계엄령에 온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급박했던 그날 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당 의원들에게 각기 다른 지침을 내리며 보인 혼란과 분열상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1954년생인 전광훈은 공고 졸업 후 이른바 ‘부흥사’로 활동했다. 서울 당산동의 미인가 신학교인 대한신학교(야간)를 졸업해 목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알려진 그는 1983년 사랑제일교회를 설립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교단 소속이었다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교단으로 옮겨갔으나, 2019년 7월 면직 및 제명됐다. 극단주의적 성향이 특히 문제가 되었는데, 반공과 차별금지법 반대를 가장 원색적인 언어로 외쳐온 것이 바로 그였다. 이후 그는 스스로 새로운 교단(예장대신복원)을 차렸다. 2016년에는 기독교자유당(현 자유통일당)을 창당했고, <한기총>의 정치적 대표성이 유명무실해진 2019년 1월 한기총 대표회장에 당선되기도 했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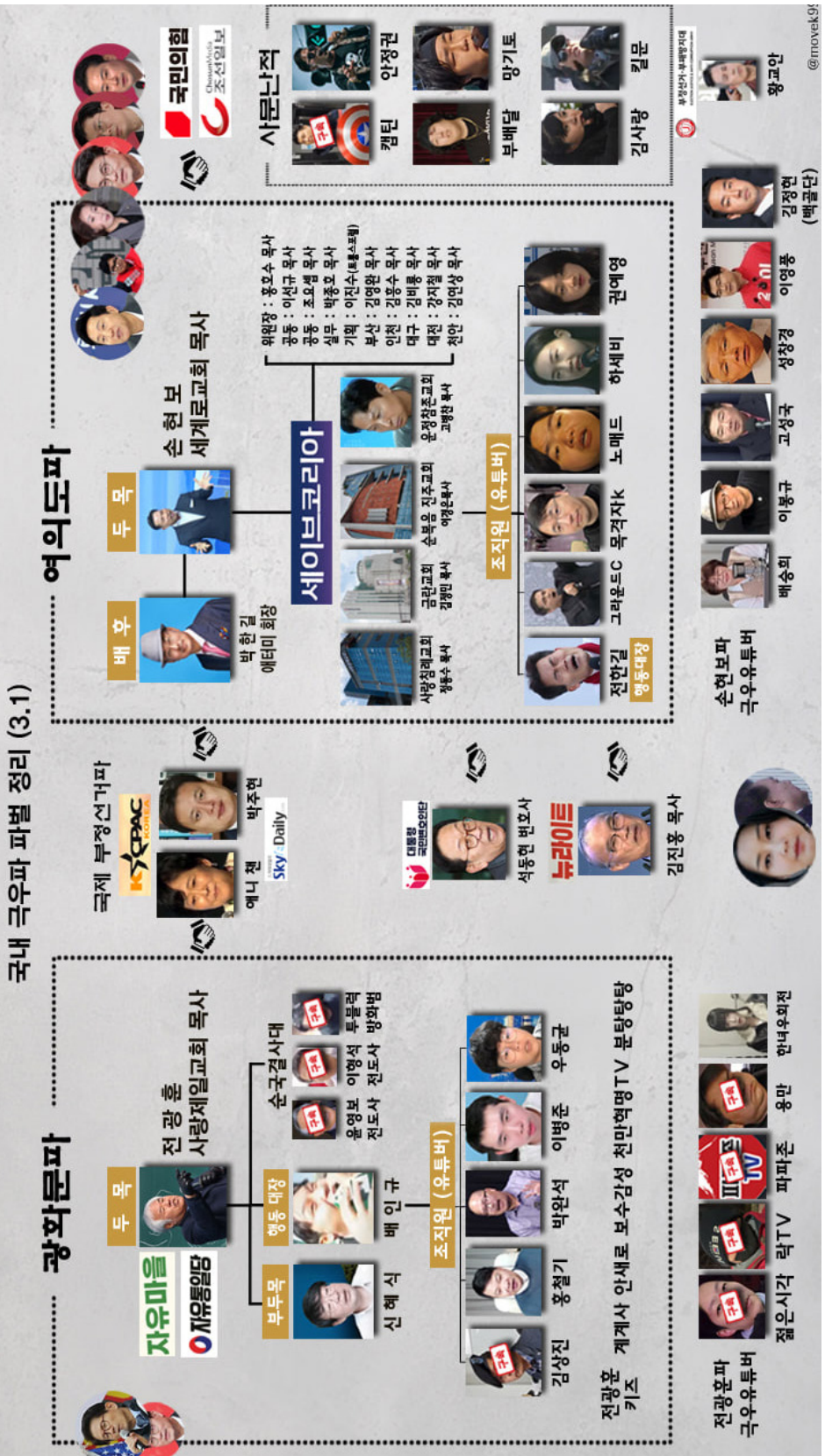
<sup>1</sup> “전광훈·손현보 ‘파워게임’... 극우의 ‘주목경쟁’ 자극적 공격성 표출”, <경향신문>, 2025. 2. 19.

그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팔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며 자신의 극우 기독교 정당을 내세우고, “유심이 애국심”이라며 알뜰폰을 팔고, ‘월 100만원 종신연금’을 줄테니 자유일보와 특정 유튜브를 구독하고 자기 쇼핑몰을 이용하라고 강권한다. 광화문에

<sup>2</sup>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사실상 교회 헌금으로 작년 총선 치렀다”, 〈한국일보〉, 2025. 3. 4.

모인 그의 많은 추종자들은 전 씨의 ‘고객’인 동시에, 그의 상품을 적극 알리는 ‘영업사원’의 역할도 기꺼이 맡는다. 이외에도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거둬지는 막대한 돈은 자유통일당의 선거자금이나 탄핵반대 집회 운영비 등 전 목사의 각종 활동에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sup>2</sup> 종교자금이라는 이유로 면세 혜택을 누리면서,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의 관리·감독을 우회하는 실정이다. 규모와 용처 등 어떠한 통제와 검증이 불가능한 검은 뭉치돈이 돌아다니고 있다.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2030 보수 남성— 온라인에서 광장으로

그러자 분노한 사람들이 법원에 침입하여 시설과 집기를 부수고, 판사를 찾아다니는 등 난동을 부렸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은 90명이다. 이들 가운데 절반(46명)은 20대와 30대였다. 그동안 온라인에 머물며 이주민, 여성, 성소수자 등에 대해 혐오 표현을 쏟아내던 극우 세력이 ‘체제 위협 세력’으로 온국민의 눈앞에 나타난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이렇듯 청년 남성 집단이 유독 많이 참여한 배경에는 일간베스트저장소와 디시인사이드 같은 남초 커뮤니티, 그리고 2030 남성 유튜브가 운영하고 주된 구독자도 2030 남성인 유튜브 채널 <신남성연대>(구독자 79만), <그라운드씨>(구독자 71만) 등이 있다고 꼽힌다.<sup>3</sup> 또한 이날 체포된 현행범 가운데는 유튜브 채널 <젊은 시각>(구독자 83만)과 <락TV>(구독자 15만)의 운영자도 포함되어 있다. 보수 성향의 젊은층이 주로 찾는 이러한 극우 유튜브 채널은 우파 시위 생중계부터 부정선거 의혹, 이주민 혐오와 온갖 음모론에 이르는 자극적인 소재로 독자의 감정을 자극한다.

<sup>3</sup> “난동인데...옹호해야 하는 국민의힘, 퀘변 퍼레이드”, <한겨레>, 2025. 1. 21.



# 우파 유튜버— 내란 장사를 발견하다

지난해 12월 3일과 지난 2월 5일 사이, 채널 <그라운드씨>의 구독자 수는 28만여 명에서 76만여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채널 <이대남의우회전> 역시 19만 여명에서 41만1000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12·3 내란 이후 구독과 후원 증가세는 보수 성향의 정치 유튜버들에게서 두드러졌다. 지난 달 유튜브 슈퍼챗 수익 상위 8개 정치 채널 중 6개가 보수 채널이었다. 이는 탄핵 국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내몰렸다는 인식이 보수 진영에 확산하면서 내부 결집이 강화된 영향일 수 있다.<sup>4</sup>

<sup>4</sup> “‘계엄 이후 구독자·후원 급증’...정치 유튜버 전성시대”, <파이낸셜뉴스>, 2025. 2. 6.

<sup>5</sup> “반지성주의 병리적 증상에 응답한 젊은 폭도들에 주목해야”, <주간경향>, 1618호, 2025. 3. 10.

<sup>6</sup> “정치인·지식인·언론인·종교인...‘반지성주의 동맹’이 병든 사회 만들었다”, <경향신문>, 2025. 2. 23.

사회학자 김왕배는 극우 청년층이 우파 노년층과 마찬가지로 ‘주변화와 소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한다.<sup>5, 6</sup> 그는 ‘인정의 부재’로 인한 불만이 타자나 세상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기 쉽다고 말한다. 추상적인 불안을 가공하여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적개심으로 제시하는 세력은 우리 곁에 언제나 있어왔다. ‘빨갱이’, 이슬람, 동성애, 중국(공산당) 등 그 대상만 바꾸어 끊임없이 변주해온 마녀사냥의 배경에는 국가(폭력), 종교(차별), 그리고 정치(분열)가 있었다.

# 국가인권 위원회의 몰락— ‘내란수괴의 인권을 보호하라’

지난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적법절차 원칙 준수’,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 등 권고를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시도했다. 1차 시도는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회의가 무산되었으나, 2월 10일 결국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고 말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세력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면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권의 가치를 스스로 왜곡하는 처지에 이른 것이다.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의 버팀목 역할을 포기하기 시작한 계기는 12·3 내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석열 정권은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 등 반인권·차별선동 인사를 임명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훼손하기 시작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복음법률가회>를 창립한 인물이다. 인사청문회 당시 그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공산혁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서부지법 폭동 직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라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뒤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 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설계되었다. 이는 인권위가 권력과

불화하더라도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지켜내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의 설립 목적을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sup>7</sup> 그러나 오늘날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sup>7</sup>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내란 주범 옹호 안건 상정이 시도되던 1월 13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사회·인권활동가들이 항의하고 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2025. 1. 13.

# 극우의 주류화— 제도 정치권이 부추기다

이처럼 12·3 내란 이후 점차 주류화되고 있는 극우의 흐름에서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과 소속 국회의원들이다. 이들이 최근 보여준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부정은 눈뜨고 보기 힘든 수준이다.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은 비상계엄이 대통령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내란을 옹호했다. 법원이 발부한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고는 ‘불법 영장’을 운운했으며,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리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사상 초유의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게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재판관 개인에 대한 악의적 비방 등을 확산시켰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것보다는 윤석열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데 골몰한 것이다.

극우의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의 주변부에 머무르는 데 그치지 않고 주류화된 데는 이처럼 제도 정치권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영향이 지대하다.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은 12·3 내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이를 밝히지 않는다. 부정선거를 믿지 않으면서도 이에 맞서지 않는다. 이들 대부분은 보수세가 막강한 지역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일부 극우 성향의 의원들이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내란을 옹호하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나서는 등 정당 전체를 극우화시키고 있고, 이는 우리 사회에서 극우 세력이 이처럼 전면화되는 기폭제가 되었다.

8 “전광훈 부정선거 출발은 자유통일당이 0석일 리 없어”, <한겨레21>, 제1550호, 2025. 2. 7.

정치학자 서복경은 “전광훈류의 주장은 보수 안에서도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sup>8</sup> 그렇게 비주류로 남아있던 이들을

중앙정치의 한가운데로 불러세운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골몰한 현 정부와 여당이다. 모든 국회의원은 임기를 열며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sup>9</sup>한다. 지난해 9월 제22대 국회 개원식 이후 채 일 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그 선서의 정신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재선을 위해서라면 사회적 갈등과 혐오를 확산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정치꾼’들만 보일 뿐이다.

9 <국회법> 제23조.

불신과 갈등, 분열과 폭력이 벌써 넘실대고 있다. 인권,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가치를 토론할 시간도 부족한데, 지난 겨울 우리가 다시 외쳐야 했던 것은 민주주의와 헌정 수호라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가치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앞 여의도공원에서 시민들이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윤석열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 2024.12.14.

8  
더 넓은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

# 대응을 모색하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대의 극우는 전지구적 현상이면서 동시에 지역과 국가의 특수한 조건 속에서 복합적으로 형성된 결과다. 따라서 극우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단순히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현실에 맞는 분석과 감시, 대응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내란을 진압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극우의 핵심 전략은 사회적 갈등을 인위적으로 증폭시키는 데 있다. 그들은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만들어 특정 집단을 국가와 민족의 ‘적’으로 규정하며, 공포와 불안을 조장해 사람들을 동원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극우와 확실히 결별하지 않는 주류 정치에 대한 냉소와 회의감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극우의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한다면, 그것을 흘뜨리고 무력화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 2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응은 하나의 참조점을 제공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트랜스젠더 권리를 후퇴시키는 행정명령을 추진했다. 이에 트랜스젠더 배우 라번 콕스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극우의 프레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들은 엉뚱한 1%에 집착하고 있어요.”<sup>1</sup> 그는 공화당이 대선에서 반트랜스 캠페인에만 무려 2억 1,500만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트랜스젠더는 전체 미국 인구의 1%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sup>1</sup> “Laverne Cox says the country is ‘worried about the wrong 1%’”, <CNN>, 2025. 2. 6.

즉, 이 ‘만들어진’ 논란은 허구적인 갈등을 마치 실재하는 문화 현상이나 사회적 위험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트랜스젠더 이슈가 이처럼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동안 대다수 국민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1%로 상징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초부유층의 정치적 영향력)는 은폐된다. 이는 유럽에서 난민 문제가 혐오에 기반한 ‘만들어진 위기(manufactured crisis)’라는 분석과도 맞닿아 있다. 이처럼 논란을 필요로 하는 세력의 의도를 해체하는 되물기 방식은

사회적 ‘논란’이 어떻게 조작되고 가공되며 동원되는지 폭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극우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움츠러들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설정한 프레임을 거부하고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가야 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극우의 위협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반페미니즘과 소수자 차별 등 혐오에 대응하는 평등 관점을 확산하며, 정치권과 미디어의 책임 있는 역할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집단적 노력과 연대만이 극우가 조장하는 분열을 넘어 더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윤석열 퇴진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 출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더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자<sup>2</sup>

<sup>2</sup> “[논평]윤석열과 극우정치를 탄핵하라 - 차별금지법 제정을 딛고 더 깊고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4. 12. 13.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극우 정치는 윤석열 정권에서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 보고서에서 검토한 것처럼 소수자를 향한 보수개신교의 혐오와 폭력에 정치권은 단호히 맞서지 않았다. 선거철이면 앞다투어 그들에게 충성을 다짐했다. 성소수자 혐오를 적극 동원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는 데 성공한 보수개신교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다. 곧이어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 등 주변화된 존재들의 존엄과 권익이 차례로 위협받았다. 견제받지 않은 차별과 혐오는 극우 정치라는 괴물로 성장해 오늘날 우리 앞에 나타났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확인하는 평등은 차별을 배제하고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존엄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다. 헌법이 평등을 천명하는 이유는 차별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등은 아직 선언에 머물러 있고, 포괄적인 입법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고 있는 이들은 민주주의의 진전 또한 가로막아 왔다. 정치는 줄곧 보수개신교 세력이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 뒤에 숨었고, 때로는 그들과 결탁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반대했다. 이런 무기력한 정치를 극복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한없이 지연되어 온 민주주의의 과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나중에 미루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혐오를 등에

업고 완성된 극우 정치와 단호히 작별해야 한다. 폭력과 극우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은 즉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우리는 더 깊고 더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12·3 내란의 종식은 윤석열 퇴진에서 멈출 수 없다. 12·3 내란이 기폭제가 되어 급격하게 확산한 극우에 맞서 민주주의와 평등, 인권의 원칙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해야 한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성소수자를,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어온 이들을 외면하는 침묵과 방관을 끝내야만 한다. 오늘날 극우의 자양분이 되었던 혐오 정치와 분명히 선을 긋고 평등을 옹호해야 할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 정치권, 언론·미디어, 시민사회에 다음의 제언을 전한다.

### 정치권

####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권을 보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체 없이 입법화할 것

#### · 소수자 인권 옹호 선언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맞서고,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옹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선언할 것

#### · 차별 실태 조사 및 제도적 개선책 마련

소수자가 경험하는 구조적 차별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을 수립할 것

#### · 혐오범죄 대응 체계 구축

소수자를 향한 혐오표현 및 혐오범죄에 대한 종합적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및 구제를 위한 명확한 절차를 제도화할 것

#### · 포용적 교육과정 개발 및 인식개선 캠페인

다양성과 포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 · 극우 세력과의 결별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극우

세력을 정치적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 **극우 단체 감시 체계 강화**

극우 단체의 자금 출처와 수입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

· **정교분리 원칙의 엄격한 준수**

특정 종교의 주장을 정치적·정책적 결정의 근거로 삼지 않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철저히 실현할 것

·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통한 극우 포퓰리즘 차단**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문화적 소외 해소를 위한 적극적 정책을 통해 극우 포퓰리즘이 확산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것

정치권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18년간 표류해 온 차별금지법을 지금 제정해야 한다. 이 법안이 차별 방지와 평등 실현을 위한 조항을 담고 있어서만이 아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혐오와 투쟁의 역사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극우 세력이 성장해온 과정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퇴진 이후,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첫걸음은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나아가 정치권은 극우 세력과 그들의 발화를 문제없는 것으로 승인하면서 주류화하지 않도록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 극우는 제도 정치의 인정을 통해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한다.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의심과 공격, 혐오와 배제의 선동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로서 온전히 존중받을 때에만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인식이 국가기관과 시민사회 전반에 깊이 자리잡아야 한다.



광화문광장에서 수많은 시민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다.  
출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2025. 1. 25.

## 언론·미디어

### · 폭력의 본질 정확한 전달

소수자를 향한 혐오, 차별, 폭력을 대등한 갈등과 충돌인 것처럼 묘사하지 않을 것

### · 인권의 기본권적 성격 인식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을 논란과 합의의 대상으로 서술하지 않을 것

### · 극우 담론에 대한 비판적 맥락 제공

극우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판적인 검토를 함께 실을 것

### · 고정관념과 증오 확산 방지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증오를 담은 콘텐츠를 생산 및 유포하지 않을 것

### · 포용과 평등을 위한 해법 제시

사회적 차별과 혐오를 다양한 관점에서 공론화하고, 포용과 평등의 가치를 담은 해결 방안을 전달할 것

### · 연대와 저항의 목소리 조명

혐오, 차별, 폭력에 대항하고 다른 시민들과 연대하는 개인과 집단의 이야기와 모습을 더 많이 전달할 것

언론·미디어는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을 때로는 노골적으로 정당화하지만, 더 빈번하게는 ‘중립’을 가장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를 단순한 의견 차이로 축소하고 왜곡한다. 언론과 미디어는 극우의 메시지를 단순한 ‘논란’으로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의제를 설정하고 확산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을 절실히 자각할 시기인 것이다.

예컨대 지난 파리 올림픽의 여자 복싱 선수와 관련한 보도 양태는 국제적인 반젠더 운동의 전략과 레토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극우의 언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쓰고 확산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이 소수자의 보편적 인권을 ‘논쟁적 사안’이나 ‘민감한 주제’로 다룰 때, 대중은 소수자가 겪는 혐오와 폭력을 ‘불가피한 현상’이나 ‘이해할 만한 반응’으로 오인하게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에게 요구되는 중립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저항하는 시민성의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보수 진영은 소수자를 배제하는 것이 당연하고 진보 진영만 이를 포용한다는 이분법적 구도는 지양해야 한다. 더불어 조회수와 수익을 위해 증오와 고정관념에 기반한 혐오성 콘텐츠를 양산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대한 철저한 자성과 비판이 요구된다. 최근 내란 사태의 주동자들이 극우 유튜브의 열성 시청자였다는 사실은 혐오 콘텐츠의 사회적 위험성을 경고하는 뼈아픈 교훈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 시민사회

### · 포용적 조직문화 구축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차별과 혐오를 지양하는 조직문화를 적극적으로 조성할 것

### · 적극적 연대

극우의 공격 대상이 된 집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대를 표명할 것

### · 소수자 권리의 비타협적 옹호

정당과의 입법 및 정책 협상 과정에서 소수자 문제를 외면하거나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

## · 저항 경험의 체계적 기록과 공유

극우에 대항했던 경험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최대한 널리 나누고 확산할 것

12·3 내란 이후 윤석열 퇴진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인 광장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과 포용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집회에서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평등수칙을 함께 낭독하고, 이를 어긴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진다. 중국인, 페미니스트,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만연한 극우 집회와 달리, 우리의 광장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분명하게 고수하고 있다.

물론 윤석열 퇴진 운동 내부에서도 소수자 혐오의 징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광장이라는 공적 공간에서는 이러한 혐오표현이 효과적으로 제어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포용적 광장의 경험이 향후 극우 세력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고 확신한다.

시민사회는 혐오정치를 배경으로 발생한 내란의 종식과 재발 방지를 위해 이러한 포용적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나아가 현재 극우에 대항하는 다양한 연대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9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전하는 메시지

# 희망에 관하여

미국과 유럽에서 트랜스젠더 혐오가 확산되고,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후퇴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옵니다. 한국에서도 성소수자 혐오 세력의 집권과 내란 사태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위협과 불안이 매우 클 것입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극단주의적 언행에서 극우 세력의 부상과 주류화를 생생하게 체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작성한 이 보고서의 목적은 단지 어두운 전망을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 상황을 더 넓은 시각에서 들여다봄으로써 돌파구를 함께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오랜 차별과 혐오에 굴하지 않고 사랑과 평화의 가치를 지켜왔음을 기억합니다. 비록 당장의 혁명적인 변화는 아닐지라도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며 삶의 터전을 일구어온 우리 모두는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갈 여정에서 서로의 힘이고 희망입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진전은 변화를 위해 연대해온 수많은 이의 헌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삼십 여년 간 마음을 모으고 연대해온 이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김용민-소성욱 부부 역시 이러한 연대의 힘을 믿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윤석열퇴진 집회에 참가한 한 참여자가 '민주주의 지키는 성소수자'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출처: 윤석열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 2024. 12. 25.

극우 세력이 부상한 요인으로 경제적 취약함과 문화적 소외가 심화되는 사회 변화가 지적되곤 합니다. 사회적 관계의 빈곤과 외로움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극우를 극복하고 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더 풍성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화합이나 서로의 차이를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의 처지에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며 다양한 배경의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현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서로를 돌보고 연대해온 역사가 바로 그러한 실천의 예시이고, 또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실마리입니다.

우리가 잘 해왔던 일들을 계속 해나갑시다. 혐오와 차별에 맞서 사랑과 평등을 이야기합시다. 소외와 배제가 아닌 포용과 이해를 추구합시다. 쏟아지는 암울한 소식에 압도되지 말고 때로는 뉴스를 멀리하며 자신을 지키되, 힘이 날 때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돌봅시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이들의 소식을 전하고, 가능하다면

정치적 행동에도 직접 참여해봅시다. 이 리포트가 분석한 극우가 낮설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새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함께 싸워온 역사에서 희망과 자부심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연대로 내란을 종식시키고 극우 정치를 무너트릴 것입니다. 앞으로 만들어갈 평등 세상에 끝까지 함께합시다.

#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시국선언문]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성평등과 다양성이 실현되는  
민주주의를 위해 성소수자 시민들이 외친다

12월 3일 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곧이어 정치적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문이 발표되었다. 국회, 선관위 등 헌법기관에 군인이 난입했고 출입을 통제했다. 민주주의의 인권의 가치를 철저히 짓밟고 이 나라 모든 권력의 기반인 시민들을 '처단'의 대상으로 삼은 그 순간,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다.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의결로 비상계엄은 약 6시간만에 해제되었다. 이후 밝혀지는 사실들을 통해 이것이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군사반란'임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변호하며 12월 7일 당론을 들어 끝내 탄핵안을 불성립시켰고, 선출되지도 않은 자격없는 한동훈과 한덕수가 권력을 나눠갖겠다는 위헌적인 선언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지난 12일 윤석열은 담화를 통해 자신의 내란행위가 정당했다며,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 그를 변호하는 한동훈과 국민의힘, 그들은 성평등의 가치를 부정하고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해왔다. 구조적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혼은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궤변도 반복해왔다. 국정감사에서는 대한민국이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주장과 혐오표현을 용인하고,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며 HIV/AIDS를 확산한다는 사람을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으로 앉혔다. 그들은 마침내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기에 이르렀다. 비상계엄 사태는 더 이상 이들이 시민들의 대표자임을 자임할 최소한의 자격도 없음을 확인시켜 준 마지막 선언이다.

1993년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전개된 이래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순간마다 성소수자들은 무지개깃발을 들고 거리에 나왔다. 무지개에는 우리의 염원이 담겨있다. “다양한 차이가 존중되고 차별 없는 사회”. 2016년 겨울, 거리에서 무지개를 펼치고 행진하며 새로운 사회를 열망했던 것처럼 다시 성소수자들은 광장을 다양한 목소리로 채우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내란수괴인 윤석열과 그에 동조한 국민의힘을 반드시 몰아낼 것이다.

성소수자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힘을 길렀다. 사회 곳곳에 서로를 이해해줄 수 있는 동지를 만들고, 서로가 마주해왔을 차별과 혐오의 상처를 보듬어왔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 서로가 얼마나 즐겁고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인지도 발견해왔다. 내 친구와 동료들이 그 즐겁고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행복하길 염원했다.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며 나 자신을 긍정하는 힘과 내 주변을 살피고 돌보며 다양한 소수자들과의 연대를 만들며 우리가 기본권을 평등하게 누리는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민들을 모욕하고 인권을 짓밟는 이들에 대한 치가 떨리는 분노에도, 춤추고 노래하며 광장으로 나선다. 그들이 박탈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행복할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다. 그렇게 성소수자 시민들은 다시 한 번 외친다.

지금 당장 윤석열은 퇴진하라  
내란공범 빠짐없이 처벌하라  
내란공범 자처하는 국민의힘 해체하라

2024년 12월 13일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16개 단체 및 4,286명 개인 일동

#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시국선언문]

윤석열과 극우정치를 탄핵하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딛고 더 깊고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 윤석열의 계엄, 그 뒤에 소수자 차별과 혐오로 힘 키운 극우정치가 있다

2024년 12월 3일, 혐오로 힘과 세력을 키우던 정치는 마침내 극우 정치를 완성했다. 윤석열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며 안티페미니즘 정부를 출범했다. 임기의 절반밖에 안되는 2년 반 동안 이 사회 시민들의 존엄을 지속적으로 훼손하며 혐오의 지지를 키워나갔다. 아직도 일터는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누군가는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위험한 현장에 내몰린다. 그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가 녹록치 않자 아예 장관도 임명하지 않고 부처의 기능을 위축시켰다. 노조법 개정안에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건강과 목숨을 잃어가는 것에는 무관심하다. 돌봄 노동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은 그대로 둔 채 이주노동자들을 최저임금제도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를 한다. 극심한 성차별의 현실은 외면한 채 선주민의 저출생 대책이라는 핑계로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려 든다.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반성도 없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만 회피하였다. 폭주하던 그의 행보는 기어코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았다. 그 누구도 감히 떠올려보지 않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훼손이라는 만행으로 그 정점을 찍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인권과 존엄을 경시하던 정권이 완전한 극우 정치를 선언하던 그날 현장의 증인들이다. 윤석열과 그 정권을 비호하는 이들은 더 이상 '보수 정치'가 아니다. 그들은 파시스트, 극우 세력이다.

## 17년, 차별금지법 수난의 시간이자 혐오 정치가 힘을 키운 시간

극우 정치는 윤석열 정권부터 시작되었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누적되어 온 차별과 혐오의 역사가 만든 결과가 바로 지금의 극우 정치이다. 차별금지법이 겪어온 수난의 시간을 살펴보자.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하고 시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성적지향, 학력, 고용형태’ 등 7개 사유를 삭제하며 이른바 “차별조장법”을 발의했다. 그 배경에 보수기독교의 반동성애 혐오정치가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 17년 동안 정권은 계속 바뀌어왔지만 차별금지법은 제정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선 보수기독교, 보수기독교의 혐오선동을 막기는 커녕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주장으로 힘을 실어준 정치는 모두 헌법의 정신을 가로막아온 공범이다. 정치는 정권을 막론하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시민들과 약속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평등의 약속은 언제나 나중으로 내팽개쳐졌다.

헌법 제 11조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제정 권고 등으로 그간의 정치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무에 있어 면피하는 척이라도 해왔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마저도 국정과제로 꼽거나 NAP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런 시늉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국정과제는 커녕 제4차 NAP에서 차별금지법은 아예 삭제되었다. 심지어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차별시정을 권한을 가진, 2차례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돌이켜보면 안창호의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 답변들은 지금 윤석열이 쏟아내는 극우 유튜브 차별선동의 언어들과 동일하다. 윤석열 같은 극우 정치가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을 잠식하고 있다. 지난 열흘간 윤석열의 행보는 스스로가 내란의 우두머리이자 극우 정치의 우두머리임을 자백한 것과 같다. 광장에 모이고 외치는 우리는 윤석열을 끌어내리면서 극우 정치를 함께 끝장내기를 선언한다.

## 헌법의 약속은 민주주의와 평등이다

한국사회의 모든 시민들이 ‘헌법’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대다.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모두가 헌법 정신을 훼손한 윤석열의 횡포에 분노하고 있다. 헌법은 군사정권에 맞서 광장에 뛰쳐나온 시민들이

만든 우리 사회의 약속이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이렇게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전제 하에서 성립되는 정치체제이다. 그렇기에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은 차별을 배제하고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존엄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다. 그러나 평등은 아직 선언에 머물러 있고, 포괄적인 입법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헌법이 평등을 선언하는 이유는 차별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고 있는 이들이 민주주의 진전 또한 가로막아 왔다. 성소수자가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마땅한 권리를 갖는 것조차 결사반대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이 그 중심에 있다. 정치는 때로 보수기독교 세력이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 뒤에 숨었고, 때로는 그들과 결탁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반대했다. 이런 정치 권력을 넘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한없이 지연되어 온 민주주의의 과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다.

### 극우 정치 이제 여기서 우리가 끝내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17년 3월, 탄핵의 봄에 재출범하였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는 불평등을 넘어 새로운 사회를 열자는 그 해 광장의 열망으로 이어졌고, 우리는 함께 그리던 새로운 사회의 미래를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나중에’로 시작하던 광장의 새정치는 끝내 차별금지법을 나중, 그 나중으로 미뤘다. 우리는 경험했다. 그 나중으로 밀려난 것은 단지 차별금지법이나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시민들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줄줄이 폐지되거나 폐지 위기에 놓였고, 이주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고 선주민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제도적 시도가 이어지고, 여성들은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폭행당했으며, 갈라치기 정치의 중심에 소환된 장애인들은 하루도 투쟁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12월 3일 밤, 거리로 뛰쳐나가 맨몸으로 군대를 막아낸 시민들은 매일 전국의 광장에 모이고 있다. 그 자리에서 시민들은 정치가 나중으로 미뤄둔 우리 삶을 다시 세우는 평등의 선언을 하고 있다. 계엄이라는 무도한 폭력이 짓밟으려던 민주주의의 자리에서 이 선언들을 바탕으로 헌법정신을 다시 세워내야한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나중으로 미루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혐오를 등에 업고 완성된 극우정치에 영원한 안녕을 고한다.  
차별과 배제의 시대를 뒤로 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딛고 더 깊고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2024년 12월 1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극우 리포트 — 성소수자 협우에서 내란 옹호까지

## 발행일

2025년 3월 22일

## 지은이

권순부, 류민희, 박한희, 송이원, 심기용,  
이호림, 장예정, 정성조

## 디자인

스튜디오 빠른손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gbtqact.org](http://lgbtqact.org)

[lgbtqact@gmail.com](mailto:lgbtqact@gmail.com)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http://equalityact.kr)

[equalact2017@gmail.com](mailto:equalact2017@gmail.com)

## 사진제공

뉴스앤조이

©2025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 Licensed  
under CC BY-NC 4.0











외면하던  
차별과 혐오의  
폭력들이  
극우가 되어  
사회에  
되돌아오다.